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는
**충청남도
의회 소식**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소식

제286회 임시회·제287회 정례회

72

CONTENTS



- 02 개회사
- 03 본회의
- 04 핫이슈
- 08 의원논단
- 12 도정·교육행정 질문
- 27 5분 발언
- 36 현장의정
- 37 상임위원회
- 43 의원주장
- 44 제286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 48 제287회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 51 연구·토론
- 53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팡파르
- 57 제10대 의회 전반기 결산
- 60 포토의정
- 66 느낌충남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를 마치며
의원 단체사진



충청남도의회소식지 제72호

- 발행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편집 | 총무담당관실 기획홍보팀
- 전화 | 041)635-5102
- 팩스 | 041)635-5009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디자인·제작 | 용해기획인쇄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6월은 '현충일'과 '6.25전쟁일'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며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을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87회 정례회는 지난 2014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제10대 전반기 의회는 21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며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17회 253일간의 회기동안 226건의 각종 조례안을 발의 및 심의·의결하는 등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3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비회기 중에도 각 지역의 현안들을 청취하는 등 쉼 없는 발걸음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여섯 개 상임위원회와 여섯 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충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하고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5월 중순,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필수 사전 절차인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도 생략하며 지역 간의 분쟁만 더욱 키우게 될 소지가 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도내 시·군은 물론 타 시·도와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만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본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모든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남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측정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오염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우리도가 정부의 다양한 환경오염 대책에 함께 참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의회는 마무리가 되지만,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격려와 응원은 물론 다양한 충고에도 귀 기울이면서 새로운 후반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1.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 기 영



추경 등 25개 안건 처리, 도정 및 교육행정 핵심과제 대안 제시

충남도, 도교육청 추경 각각 6,684억 원, 1,677억 원 증액 ... 안전 등 필수사업 반영
도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 8건 등 총 15건 심사·의결... 도민 행복지수 상승 기대



충남도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와 제287회 정례회 등 27일간의 의사결정을 마무리했다.

5월 10일 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 개최한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추경 심의를 통해 충남도 예산규모를 본예산보다 6,684억 원이 늘어난 6조 2,964억 원으로 확정했다. 도교육청 역시 추경을 통해 3조 202억 원으로 1,677억 원을 증액시켰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 6억 7,000만 원과 58억 7,0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지만,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돌리면서 총액은 줄지 않

게 됐다.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도 대거 채택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7일간 개최한 제287회 정례회에서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8건 등 총 17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도정질의에서는 총 10명 의원이 26개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사안 등 영킨 실태를 풀었다는 평가다. 의원들은 도정 핵심인 3농혁신 등 농정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ot Issue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관할구역 경계 조정, 사실상 행정자치부가 전권... 지방자치 역행하는 처사
지자체 자율권 행사 통해 다양한 방향성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자치관할권 사수해야



충남도의회는 5월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 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핵심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중앙분쟁조정 위원회 의결 및 행자부 장관 결정으로 변경토록 한 것이다. 당장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놓고 도계 분쟁을 겪고 있는 충남도에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개정안인 셈이다. 따라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선 의원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장기화 된다고 하여 행자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자율권을 행사해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이 허용되면 지방자치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와 함께 이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해 자치관할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행자부를 비롯해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전기생산지역과 소비지역 전기요금 차등 골자… 불합리한 구조 바로 잡아야
전기요금 싸지면 기업유치 쉬워지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기반 마련 등



충청남도의회는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재표 의원은 6월 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전기생산지역이 감당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은 별다른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불균형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홍재표 의원이 이날 밝힌 제안 설명서에 따르면 충남의 전력 생산량은 전국대비 23.4%(2013년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생산한 전력 생산량의 62%가량을 수도권으로 보내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712억 원(2010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나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 피해는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하다는 것이다.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쓰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 7,700만 톤, 온배수 방류로 인한 주변 어장 및 갯벌 황폐화 등 피해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지역에 집중 설치된 발전소를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발전소 주변 시설을 기준으로 거리별 전기요금을 차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재표 의원은 “도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과 국회, 정부에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며 “지방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자 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산업통산자원부를 비롯해 국회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김 연 의원

정부가 시행 예고한 맞춤형 보육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비취업모 자녀 차등 문제

정부는 보육의 질 하락시키는 예산절감용
보육제도 즉각 철회해야...
차별 없는 보육 실현 요구

충남도의회는 6월 17일 제2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가 시행 예고한 맞춤형 보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내달부터 0~2세 아동(48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이용시간대를 전업주부인 경우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 미만으로 이용시간을 줄이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김 연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아동 발달 측면만 고려한다면, 맞춤형 보육정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맞춤형 보육정책은 비취업모 자녀의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을 20%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적정원가에 미달하는 저가보육료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보육료 20%가 삭감된다면 어린이집 정상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저가보육료 체계와 12시간 종일보육제가 먼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예산 절감목적으로 하는 20% 삭감방식은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할 것”이라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 악화가 명백한 보육정책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상 차별 없는 보육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 채택



김홍열 의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교육환경 악화 및 지방자치
기반 무너뜨려

도내 청양교육지원청 폐지 대상...
정부는 지역 특수성 고려하고,
교육 공공성 외면 말라

충남도의회는 6월 17일 제2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홍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소규모 학교와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통해 농어촌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지방자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농어촌지역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어민 소득향상을 통해 농어촌 인구감소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 명 미만 교육청은 보조기관 없는 단일 조직 수준으로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충남에서는 청양교육지원청이 폐지

대상이 된다.

김홍열 의원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은 교육 공공성을 외면하고 지역교육을 황폐화하려는 정책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수와 학생수가 지속 감소하는 지역 특수성과 농어촌 교육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정책"이라며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도 필요하지만, 단지 경제적 효율성 시각에만 치우친 교육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며 "통폐합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7년생 청소년들의 성년을 축하하며

장기승 의원

올해 만 19세의 성년을 맞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69만 5천 명을 약간 밑돈다. 이중 남성은 36만 7천 명이고 여성은 32만 8천 명이다. 성년의 기준은 2013. 7. 1 개정된 민법 제4조에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고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성년의 날에는 성년을 축하하기 위해 직장에서는 기관장의 훈화와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 다과회 등을 가지며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성년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지혜를 나누고 선물도 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적이다. 성년의 날은 1973년 처음 시행되었다.

성년에 이르면 국회의원, 대통령, 지자체장 등과 같은 각종 선거권을 취득하고 전·월세와 같은 계약행위 등 독자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흡연, 음주의 금지 등 제한이 해제되고 운전면허와 같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성년은 미성년과 달리 사회인으로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올라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성년이 되면 병역과 같은 의무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보통 19세가 되면 대학 1학년 또는 군에 입대해 있거나 유명 대학 진학을 재도전하기 위해 학원가에서 가슴 졸이며 공부하고 있다. 대체로 성년을 지나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하늘의 별과 같은 직장을 잡아야 하는 부담감, 결혼하기 위한 아파트 전세 값, 자동차 구입비 등 경제적 부담감과 같은 무거운 책임감에 눌러 꽃 같은 젊은 날의 청춘을 보내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3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 추이를 보면 2014년에 10.4%, 2015년에 10.9%, 2016년에는 12.2%로 고용동향과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취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자 이들은 해외취업이라는 극단처방을 내리기도 한다. 유능한 젊은 청년인재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아쉽고 가슴 아픈 현실이 된 것이다. 차라리 대학진학을 뒤로 미루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직장생활을 하는 편이 더 나은 것인지도 모른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시련은 젊음의 보약이라 말한다. 그러면서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이며, 목표를 당당하게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 삶을 살라고 말한다. 전국방송으로 더욱 유명해진 김미경 대표도 '드림온'에서 꿈은 성찰이고 성장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말한다. 철저한 자기관리로 꿈을 성장시키라고도 말한다.

2016년도 성인식을 치르는 전국의 69만 5천여 성년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 청년들이 맑고 밝게 웃을 때 국가의 미래는 비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제 막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깨닫게 하고,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성년을 맞는 청년들이여!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끈기와 열정의 집념으로 시련을 극복해 맑고 밝은 웃음꽃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가득 피어나길 바란다.



6월의 단상(斷想)

유익환 의원

6월은 신록의 계절이자 호국 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호국·보훈행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호국 보훈'이란 거창하고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값진 나라 사랑이 들어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현충일도 그냥 쉬는 날로 기억되곤 한다. 올해도 연휴로 인식하여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조기를 다는 것마저도 귀찮아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나 학교에서 애국에 대한 교육보다 지금 당장 시급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느라 어렸을 때부터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애국심이 생길 겨를이 없다.

6.25 전쟁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 국군이 왜 싸웠는지 왜 수많은 동포들이 피난살이를 해야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 시대에 피 흘리며 싸우고 살아온 선진 세대가 일깨워야 하는데 대부분 사라져 가고 있어 문제다.

6월 한 달 만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그들의 뜻과 고귀한 희생정신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라 사랑'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특히,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선 지금도 북한은 도발 행위를 거듭하며 핵을 앞세워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어느 언론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64개국 중 우리나라 국민의 42%만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했고 중국인은 71%, 미국인은 44%의 응답이 나왔으며 64개국의 평균은 61%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을 희생시켜 온 분들의 고귀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간직하고 있어야 하겠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의 사망자수는 늘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참전유공자 746명이 돌아가셨고 이는 월 평균 62명의 사망자수다.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을 더욱 새롭게 해야 할 때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정신을 가다듬고 국론을 한데 모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여야 할 것이다.

호국 보훈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어느 캠페인 문구처럼 다시 한번 호국 보훈의 의미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정치, 경제, 교육 등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이 안정되고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전해가는 바탕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이 땅에 아버지로 산다는 것

유익환 의원

영화 국제시장. 이 영화는 국내 1,4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했을 정도로 우리지역 사회 곳곳에서 회자되며 깊은 울림으로 퍼지고 있다. 필자도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울고 웃으며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

영화 국제시장은 전쟁과 경제개발시기를 경험하지 못한 후 세대가 앞 세대의 역정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할 다큐멘터리와 같았다. 영화 속 윤덕수(황정민 역)의 인생은 지금 세대는 이해하지 못할 선택 선상에 마주한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버리고, 국가와 같은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희생하곤 했다. 나를 위해 살라는 아내의 '외침'은 가장이라는 '가치' 앞에 압도당했던 것이다.

가족들의 아늑함과 단란함을 위해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했던 장남이며 가장인 덕수, 오빠로, 형으로, 아들로, 후에는 남편으로, 아버지로도 흠 잡을 곳 없는 완벽한 아버지의 상으로 여겨진다.

최근 한 TV방송에서 한국의 아버지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만약 내 생명이 1년 밖에 안 남았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말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같이 가족을 위해 뭔가를 남겨놓기를 바랐다. 내가 떠난 후에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돈을 더 벌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은 수컷이 알을 품고 새끼를 키운다. 영화 60도의 혹한에서 무려 4개월 동안 먹이를 먹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새끼를 위해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 품는다. 꼭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아버지들의 삶을 빼 닮았다. 그렇다 이 땅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 그중에서도 역동의 시절을 겪었던 한 세대를 이야기 한다면 단연,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다.

6.25가 끝나고 1952년~1963년 기간(53~64세)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나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가난한 어린시절을 지나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급격한 경제, 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가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성장동력세대, 경제성장의 주역인 '산업일꾼'으로 불리면서까지 열심히 일했던 그들, 그들의 중심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아들, 딸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 준비에는 소홀했던 우리의 아버지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 앞으로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쳤지만, 이젠 나이 먹어 자식들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들.

충남도 공직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도청 사무관(5급) 415명 중 345명(83%)이 2022년에는 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를 보면 충남도내 65세 이상 인구현황이 2012년 30만 9,840명에서 2015년 33만 7,814명으로 2만 7,974명이 증가했다. 이는 충남도내 인구 비율의 16.3%에 해당한다고 한다. 충남에서도 노인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가정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세대적 과제는 더 이상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는 현재를 온전히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인터넷 청정국가로 가기 위한 제언

김종문 의원

요즘 마스크에 연일 오르내리는 것이 SNS를 통한 음란동영상 유포,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원조교제, 온라인 사기 등 청소년 범죄다.

최근 우리 도내 10여 명의 일진 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공유하다 불구속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모 학생은 게임중독에 걸려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끝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인터넷은 우리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의성을 증대해 왔으나, 이렇듯 여러 역기능을 생산하고 있다.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SNS를 통해 재빠르게 확산되어 모방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아직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우리 청소년들을 인터넷의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충남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현황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은 3,506건, 2014년은 3,383건으로 매년 3,0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3,000여 명의 학생들이 구속·불구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재목들이 인터넷 공해 속에 범죄의 온상에 노출되어 미래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공해로부터 충남의 학생들을 보호하여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285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내에 있는 PC에는 음란물과 인터넷·게임중독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실현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이제는 학교 밖으로 눈길을 돌려야 할 때다. 충남 도내의 PC방의 개수만 해도 756개며 컴퓨터 대수는 36,000대에 달한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정, PC방, 공공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PC를 접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실행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작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청소년보호앱'을 청소년 스마트폰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T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유해물 차단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독려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충남을 '전국 최초의 인터넷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인터넷 공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지금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골든타임이다. 충남을 기점으로 본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가 인터넷 청정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서형달 의원

Q1 우여곡절 끝에 충남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음.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름. 교육예산 누리과정의 정치적 논리로 학부모와 유아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바람.

A1 정치적이라고 전혀 판단하지 않음.

Q2 작년 5월 충남교육청에서 자신 있게 발표한 유아성장발달 책임교육제가 있음. 교육위원회에서도 잘 모름. 담당 과장이 얘기를 안 함. 유아성장발달 책임교육제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알려주기 바람.

A2 모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 따로 있고 그것에 따라 운영하면서 수업이 됐든 교육활동을 전개하면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음. 그런 과정들을 잘 정리해낸 것이 용어만 학생성장발달책임제 또는 유아성장발달책임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임. 모든 교육은 다 그렇게 이루어짐.

Q3 시·군 교육청에서 통일부가 주관하는 통일교육에 대해서 본청에서 돈만 줬지 과연 시·군 교육청에서 행사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봤는지. 우리 세대가 죽더라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나 교육감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함. 학교통일교육 전담장학사를 두겠는지 안 두겠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A3 전담장학사 부분은 좀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 됨. 내년 5월에 전문직 선발 시 통일교육담당장학사를 선발해서 후년부터 임용하겠음.

Q4 다문화가족 학생 비율이 충청남도가 많음. 우리 나라에 온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대한민국으로 시집온 분들, 대한민국 가족임. 다문화가족이 20년 동안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이면서도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이동했음. 그런데 현시점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포용과 의식은 제자리 걸음임. 열심히 지도해야 함.

A4 공감과 참여로 다함께 어울리는 다문화교육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림.

Q5 다문화유치원이 충청남도 8개읍. 유치원 현황으로 금산유치원 18, 부여 세도초 병설유치원에 10명 있음. 다문화유치원 운영 신청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돈을 더 줌. 문제는 다른 유치원들과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임.

A5 특수학급에 일반학생들보다 돈을 더 투자하는 까닭을 생각할 때 충분히 수긍 할 수 있음.

Q6 연초에 충남교육의 화두를 2개 던졌음. 하나는 참학력이고 하나는 진로진학 문제를 거론하였음. 취임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참학력이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A6 3농혁신과 참학력은 관계가 없는데 용어는 그렇게 쓰고 있음. 작년 7월에 처음 발표해서 작년 2학기 하반기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음. 기존에 과거 산업화시대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국·영·수·사회·과학 점수의 총계라고 한다면 이제 21세기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인성과 감성과 사회성,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들을 갖춰야 됨.

Q7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아는지. 그러나 교육현장에 서는 그렇지 않음. 교장이란 분들이 책임을 안 짐. 누가 책임을 지는지. 충청남도에 700여 학교가 있음. 모든 학교가 저마다 상황을 달리고 있지만 시·군 교육청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해서 책임경영을 맡기는 것임. 그런데 요즘 교장들은 그렇지 않음. 장학지도를 통해서 확실히 충남교육을 우뚝 선 학교로 만들어 주길.

A7 실제로 학교 운영의 가장 핵심은 교육과정 운영임. 그 부분에 관해서 학교장 자율책임경영제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학교 평가와 청렴도 평가 또는 교장공모제 등을 통해서 책무성을 더 높여가는 것에 최선을 다 하겠음.

Q8 학교장에 따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무사안일로 인하여 학교현장이 낙후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됨. 학교장의 자율책임경영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자료로 만들어 주기 바람.

A8 행복지원장학지원단을 현재 817명으로 구성하여 장학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수업이라든가 생활지도 또는 교육과정, 진로·진학지도 등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림.

Q9 서천에 국가산업단지가 있지만 현재 공사중임. 공사 중에 있지만, 앞으로 큰 도시로 다 나가기 때문에 장항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지사께서 현장을 확인 했으면 좋겠음.

A9 더 잘 챙겨보겠음.



김홍열 의원

Q1 충남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도시와 농촌학교의 교육적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다시 얘기해서 교육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내닫고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갖고 있는지?

A1 말씀을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도 말씀을 드리겠음.

Q2 농촌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모든 의원님들이나 교육공동체 가족들의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여짐. 혹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A2 본격적인 의미의 창의융합 인재를 키우지 않고는 산업화시대에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가르침만 존재하는 수업으로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학부모들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이 이제는 빠르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음.

Q3 우리 도에서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매년 1년에 약 1,200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음. 70년대, 80년대보다 좋아진 건 사실임. 그렇지만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은 도시에 비해서 계속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학교와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으로는 안되어있음.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 먼저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봤음. 이 점에 대해서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기 바람.

A3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공감의 말씀을 드림.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목들이 장애로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T/F팀을 꾸려서 추진계획을 짜봤으면 좋겠음.

Q4 지금 청양 정산 지역의 4개면에 있는 중학교가 통폐합되면서 36천㎡ 정도의 부지에 정산 기숙형 중학교가 신설됨. 그 학교에 시범적으로 이와 같은 마을가꾸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책을 찾아보고 있음. 옆 필지를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하든지 하면, 지번과 지번사이의 건물을 연벽한다든가 아니면 통로를 개설한다면 현행법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지. 기존에 있는 학교를 가지고는 쉽지 않은데 신설된 학교, 청양 정산 기숙형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 그렇기 때문에 한번 특단의 조치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음.

A4 시범사업으로 제안하신 정산 기숙형 중학교의 시설을 이용한 지역공동체의 결합 문제들도 학부형,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학교와 논의 과정을 함께 봐야 보자는 말씀을 드림.

Q5 삼성고등학교, 속리산중학교와 광천에 있는 신축 중인 기숙형 중학교를 갔다 왔음. 삼성고등학교를 가서 느낀 것은 교육시스템과 시설 부분, 디자인 부분이 참 뛰어났음. 학생들을 위한 동선 활용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받았음. 속리산중학교는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답게 '나름대로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음. 그런데 광천에 있는 기숙형 중학교를 제가 두 번 가봤는데 개인적으로도 한번 가보고, 5월 30일 T/F팀을 모시고 가봤는데 실망이었음.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직육면체의 건물과 아직까지 내부구조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음. 21세기를 살고 이끌고 가야 할 우리 미래의 동량들한테 왜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 정도의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할까, 학교를 삼각형으로 지으면 어떨 것이며, 타원형으로 지으면 어떨 것이며 학교 교실이 삼각형이면 어떨고 타원형이면 어떨냐. 그 속에서 아이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됨. 그부분에서 정산 기숙형 중학교를 기존에 있는 입찰방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제안형 공모 형태의 좀 획기적인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음. 앞으로 신축 중인 건물에 있어서는 파괴적인 혁신건물과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더욱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A5 말씀해 주신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함. 또 몇 개 학교를 다 가보시고 광천중학교의 경우는 두 차례씩 갔다 오신 열정에 대해서 높이 존경을 함. 정산 지역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T/F팀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면 그 논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김종필 의원

Q1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개발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우선협상에서 선정했음이 실패의 단초고, 사업자 응모조건인 사업이행 보증예치금 2,000억 원과 사업시행을 위한 땅값 공시지가 1,823억 원의 최소 반 정도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업주관사였던 에머슨퍼시픽의 자본금이 페이퍼 상 270억을 포함해서 컨소시엄을 전체 자금 60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음. 이것은 사업이행 보증금 2,000억 원의 예치 불가함이 기정 사실임에도 충남도는 우선협상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음. 6년이라는 세월을 그대로 끌고 오면서 본 사업이 곧 착공될 수 있는 양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우롱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음.

A1 안면도 개발은 많은 지적과 제안들이 있어 분할해서 현재 새로운 사업자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음.

Q2 당초 개발지 중 가장 핵심지역이,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제1테마지구였음. 그런데 이번 공모에서 제3지구,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만 들어왔음. 그 지역의 주민들은 대기업의 숙박시설만 들어오게 된 것은 '기존펜션사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음. 당초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해결방안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람.

A2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소득과 번영을 약속하는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거기에 관광지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대규모적인 투자를 유치하라고 많은 촉구가 있었음. 꾸준히 노력하겠음.

Q3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으로 사업자는 수익성을 보고 참여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값이 저렴하여 야만 분양가를 낮출 수 있고, 또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음. 그런데 충남도 같은 경우는 개발지구의 땅값이 오르지 않도록 공시지가 인상의 억제라든가 보완 등 행정적 뒷받침하는 전략이 필요했을 것임. 그러나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하였고 너무 과시성 홍보를 앞세우다 보니 기대심리만 키워놨음. 당진테크노폴리스에서 세계화상발전기금 관계자에게 사업권 이양을 충남도가 승인하였는데 그 자금 유치와 보유관리는 허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6개월을 끌어왔음. 참으로 개탄스러움.

A3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기회를 잘 관리하겠음.

Q4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건은 당진평택항의 항만시설용 제방이 1차적으로 준공되어 평택시와 분쟁 속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승소하였고 당진시가 9개 필지에 대하여 등록을 하였음. 그 이후 준공된 제방에 대하여 등록을 몇 년간 안했음. 준공된 제방을 등록만 했으면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미뤄놓는 사이에 평택시가 매립지 귀속결정 신청을 하였고,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귀속심의 절차가 진행됐음. 사후약방문격으로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재판 중에 있음. 강금실 전장관을 삼고초려 끝에 법률대리인으로 영입했다는 내용이 있음. 그 사실 여부와 영입한 계기가 무엇인지?

A4 법원 소송에 대해 국내의 유력한 법무법인을 충남도가 계약을 했고, 아산과 당진에서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을 했음. 그런 점에서 충남도의 고문변호법률을 하고 있는 분들과 상의해서 강금실 전장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펌이 우리 소송대리인으로 오면 이 법률소송에 있어서 큰 전력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음.

Q5 3농혁신 정책은 1단계 사업비 4조 3,000억 원과 2단계 사업비 5조 1,000억 원인 예산이 허구가 숨어 있음. 5년간 총 5조 9,037억 원을 투입했는데 국비가 46.4%인 2조 7,447억 원, 시·군비 24.85%인 1조 4,676억 원인 반면 우리 도에서 투입한 예산은 7,494억 원으로 12.6%임. 농가 등이 자체 부담한 금액은 9,419억 원임. 도비 투입액 중 도비 매칭비가 그중에 3,426억 원이 있음. 이를 제외한 우리도 3농혁신 관련한 자체 예산은 4,068억 원임. 3농혁신과 관련이 없는 초·중 무상급식비 예산이 4,902억 원 포함되어 있고, 우리 도비 예산중에는 1,138억 원의 이해하지 못할 돈이 숨겨져 있음. 이밖에도 3농혁신 관련해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55억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72억 원, 편안한 물길 조성비 547억 원 등 총 1,600억 원 정도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3농혁신에 쓰여진 충남도 자체 예산은 고작 2,5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연평균 500억 원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임. 연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3농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람.

A5 처음부터 지방 책임자로서 살림을 할 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책의 품질을 높여서 우리 농업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림.



강용일 의원

Q1 구제역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에 충청남도에만 468건이 발생했음. 2000년도에는 전국 구제역 발생률의 10% 정도가 충남에서 발생했음. 그런데 최근 3년간은 약 43%가 발생이 됐음. 4배 이상 충청남도가 더 발생되었음.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21건이 발생됐고, 그중 약 90%인 19건이 충청남도에서 발생했음. 전북 김제·고창에서도 발생했는데 사료차량이 충남 농가를 방문한 뒤 그 사료차량 때문에 충남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음. 이것은 충남도가 구제역의 취약 지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A1 현재 우리가 청정지역에서 백신국가로 2012년도에 국가가 정책을 전환했을 때부터 구제역 보유 국가가 되어 있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에 대한 백신처방이 현재 수준이고,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되어 청정국가 지위로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음.

Q2 충청북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음. 충청북도는 2015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했음. 그래서 충북도에서 방역을 하고 백신접종을 하고 공무원을 많이 동원했음. 노조에서 반발도 있었지만 작년에 이동통제 해제를 하고,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음. 충북에서는 청정지역을 지켜 닭고기와 계란을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음. 백신을 하지 않아야 청정지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임.

A2 백신접종을 한 상태는 청정 지위국 안 됨. 백신접종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국제기구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함. 국제 농수축산물의 교역에 있어 청정지역의 지위를 얻는 데 로컬단위로 주는지는 못 들어봤고, 국가 단위로 줌.

Q3 일본은 2010년도 4월 20일 구제역이 발생했음. 그래서 2010년 5월 18일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했음. 그 다음 같은 해 백신접종을 결정해서 5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7월 27일 이동통제 및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고 8월 27일 종식선언을 했음. 그 다음 해 2월 4일에 백신 미접종 청정국으로 지위를 회복했음. 종식선언을 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한 것임.

A3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청정지역이 되기가 어려움. 청정지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그러려면 자연항체 형성 즉, 백신으로부터 형성된 항체가 아닌 자연상태에서의 구제역이 몸에 들어와서 형성된 항체유이 제로가 되어야 됨.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임.

Q4 지금 계속 백신에만 의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백신 바이러스 균을 다 죽이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가, 두 번 이상 발생한 경우가 우리 도내에서 15농가임. 한 번 발생했던 농가에서 또 다시 발생을 하고, 그 농가 축사의 바닥, 벽, 어디든지 심지어는 사람의 옷까지도 바이러스가 살아있다는 것임. 그래서 온도가 4℃일 때에 바이러스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 전에는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움직이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상황임. 그러다 보니 계속 백신에 의존을 함. 백신 처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종식 선언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균이 없을 때 종식 선언이 되는 것임. 지금 특별 방역기간이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임. 이후부터는 일반 수준으로 그냥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 충남도는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임. 구제역 바이러스를 어떤 방법이 되든 다 박멸을 시킬 방법을 찾아야 됨. 그렇게 해야만 종식 선언이 되고 백신이 필요없게 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임

A4 현재 노력은 개별농가에 백신처방을 통해서 구제역을 각 농가 단위별로 이겨내 보자라는 정책으로 지난해에 계속 해왔는데 백신처방이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률도 떨어지고 또 백신접종에 관한 농장단위의

책임도 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제 접종을 하고 일제 조사를 해서 일단은 기본 출발선을 만들어 놔음. 지금부터는 축사를 비롯한 농장단위의 축산업의 시설을 좀 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법정 사육두수를 중심으로 하는 적절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것들 또한 필요함. 축산조합 및 농가들과 함께 7월 달에 이행과정을 합의하려고 함.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역으로부터 청정지구의 축산업으로 나아가는데 큰 전환점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Q5 구제역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는 농가라고 생각을 함. 일본 경우에 구제역이 종식되어서 청정 지위를 얻는 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어봤는데 완전 통제를 했음. 종식 선언을 할 때까지는 통제를 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음. 농가들이 내가 옮길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의 의식전환이 문제임.

A5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청정지역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음.

Q6 처음 도의원 됐을 때 재선충이 자주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음. 보령에서 시작된 재선충이 태안, 서천, 논산, 세종에서 발생되었고, 금산에서도 8본이 발생되었음. 하루에 약 20만 마리가 번식되는 무서운 재선충, 그러나 방제방법은 있음. 청정지역을 회복한 곳도 열네 곳인가 있음.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A6 그러겠음.

Q7 백제문화관광단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2017년도까지는 꼭 끝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A7 구제역과 재선충, 백제역사자연단지의 롯데 투자와 관련된 당부 말씀에 대해서 꼭 잘 추진하도록 하겠음.



전낙운 의원

Q1 국방대 이전사업의 예산 규모와 진도가 어느 정도 인지. 연말까지 준공된다고 하는데 공사상의 진도에 차질은 없는지.

A1 지금 661천㎡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 규모는 3,500억 원 정도임. 진도는 50% 진행되었음. 내년 2월에 개원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2 전임 지사께서 국방과학 · 산업 · 교육 · 연구단지가 통합된 클러스터 비슷한 99천㎡의 위성도시를 조성해서 1만 5,000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음.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는 골프장을 약속했음. 체력단련장이 본래 충남도가 책임져야 될 어떤 이유나 법적근거가 있는지?

A2 국방대를 유치할 때 지원계획서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음.

Q3 현재 국방대 694천㎡ 중에 429천㎡를 활용해서 아파트 주거단지와 학교 교육시설을 짓고, 264천㎡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 그곳에 체력단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비용이 문제임. 건설비용을 충남도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A3 전임 지사께서 약속하신 사항은 “부지는 국방대에서 마련을 해라” 해서 부지는 국방대에서 마련했음.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충남도가 지원을 하겠다고 한 사항이 한 200억 원 정도 규모임.

Q4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해 오면 여러 효과가 있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주요 직원자, 정부투자기관의 주요 직원자들이 논산에서 1년씩 공부하고 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브랜드 효과, 인지도 또는 지역 밀착해서 얻는 반사이익이 많이 있는데 그 효과가 내포처럼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안 오고 빈자리가 많아서 제 효과가 안 나겠지만 이것이 3년, 5년 이렇게 지나 정착이 되면 약 2,0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유입되고 지역경제에 500억 원 이상의 재정효과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충남도가 논산 · 계룡지역에 국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방대가 요구한 것을 원만하게 해 주는 것이 국방산업단지 유치나 앞으로의 산업단지 발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겠지요?

A4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Q5 현재 보존돼 있는 24천㎡를 환경영향평가, 지표조사, 지장물 발굴을 거쳐서 골프장 설계까지 초기 투자비를 국방대에 기부채납해서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A5 기재부나 국토부에 방문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지원계획에 포함시켜놓은 사항이고 또 전임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반응을 앓고 있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Q6 모든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오폐수 발생 업소들은 자체 개별적인 정화시설을 일단 계획해 가지고 그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의 허용기준을 공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그걸 가지고 인허가를 받음. 그리고 각 개별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통합 종말처리장으로 모아서 한 번 더 걸러가지고 배출됨. 그런데 논산 일반산업단지 문제는 공단을 개발해 놓고도 입주업체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 이렇게 한 것임. 원래는 자기 공장마다 폐처리 시설을 한 번 거쳐서 나와야 됨. 또한 1일 폐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1,600톤인데 불과 60여%에 해당하는 940톤밖에 안 들어옴. 전체적으로 보면 ‘폐수처리 능력이 아직도 40%가 남았네?’ 언뜻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BOD 하나만 보더라도, 화학적 산소요구

량의 기준이 통합 종말처리장의 경우 ㄹ 당 230mg인데, 실제로 들어오는 찌꺼기가 섞인 BOD를 측정하면 790mg임. BOD, COD도 이런 기준들이 정상적인 오폐수 처리공장의 3배, 4배씩 초과된 아주 고농도 폐수가 들어오고 있음. 2014년 1월에 환경 분야의 승인권까지 논산시로 오기 전에는 권한이 도에 있었음. 그래서 2011년, 2012년, 2013년, 3회에 걸쳐서 각각 과태료 처분받고 개선명령을 받았음. 그런데 문제는 환경법에 3회 이상 배출수에 문제가 있으면 환경기술공단에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따져보게 되었음. 그 사이에도 2014년도에 BOD가 대폭 초과되어 1억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폐수 배출업소마다 지금이라도 자체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임. 그런데 지금 만들려고 하니 공장 지을 때 함께 지으면 1~2억 원 하던 것이 지금은 3~4억 원, 5~6억 원이 듬. 결국은 정부기관이 자기들이 잘못했던 과오를 업체들한테 떠넘기는 것임.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한 결과는 원폐수 처리공장이 없어 찌꺼기까지 막 그냥 들어오니까 거름망이 자주 고장나니 이 시스템을 보강하라 함. 또 찌꺼기 등 이런 협잡물이 들어오니까 오폐수시설 밑에 슬러지가 많이 쌓임. 찌꺼기를 긁어가지고 탈수해서 버려야 됨. 그러나 탈수기를 쉬지 않고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예비기가 없음. 예비기 설치하는 데도 3억 원의 추가투자가 필요함. 기술공단에서는 5년 이내에 전처리시설을 대응할 수 있는 생물반응조를 만들라고 함. 설계비까지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임. 탈수기와 예비기까지 하면 7억 5,000만 원인데, 예비기는 차후에 추진하기로 하고 4억 5,0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임.

A6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의 어려움, 처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 봤을 때 강을 살리기 위한 다른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겠음.



백낙구 의원

Q1 민선 5기에 3농혁신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4조 2,090억 원이나 되고, 민선 6기에도 5조원이 넘게 투자될 계획임. 총 9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거나 투자될 계획이고,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5~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농어민들이 납득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함.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경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내 농가당 연간 농가소득은 3,471만 8천 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소득 3,721만 5천 원 보다 249만 8천 원이 낮은 실정임. 민선 5기인 2012년의 경우, 도내 농가당 연간 평균소득은 3,321만 7천 원으로 전국 평균 3,103만 1천 원보다 높았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의 도내 농가 평균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져 9개 도단위 가운데 하위권인 7위라는 불명예를 얻는 실정에 놓였음. 현 단계에서 3농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평가를 실시하여 과감히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람.

A1 3농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볼까 고민하겠음. 통계청에 원자료를 놓고 어떻게 조사를 한 자료인지를 본 다음 부족한 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음.

Q2 산림환경연구소는 그동안 우리도 관내에 위치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2012년 7월 1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현재는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음. 제28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로의 이전을 촉구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산림환경연구소가 세종시로 편입된지도 벌써 4년이 지났고, 매년 25억 원이 넘는 시설투자가 이루어지

고 있어 일부 도민들은 비생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하루빨리 도내로 이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산림연구는 물론 산림박물관을 운영하여 도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이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람.

A2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문제는 세종시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재산과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복잡한 문제가 서로 간에 걸려 있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산림환경연구소를 도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Q3 무창포 해수욕장의 주 진입로인 지방도 606호의 4차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지난 제284회 5분 발언을 통해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음. 현재 시행중인 국도 21호 확포장사업과의 연계 그리고, 오는 7월 착공 예정인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도 606호 일부 4차선 확장과 관련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이 시급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음. 지방도 606호는 전국에서 매년 2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신비의 바닷길로 잘 알려진 무창포 해수욕장의 주 출입로로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21호, 국도 40호와 교차되는 중요한 도로임. 웅천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는 2018년 이후에는 구룡농공단지와 함께 물동량의 증가로 지방도 606호의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높아져 사회적 손실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현재 왕복 2차선 도로인 지방도 606호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람.

A3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일 교통량이 약 7,300대 정도가 되어야 확장에 들어가는데, 현재는 4,400대 정도 수준임. 그렇지만 교통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 교통수요가 있을 수도 있음. 이 부분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시행

해 보도록 하겠음. 다만 이 방안에서는 4차선 확장하는 부분과 함께 현 2차선에서 선형개량이라든가 도로폭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Q4 최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도민들의 학교체육 시설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장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의 장기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부담이 커져 가고 있음. 도민들은 교육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의 개정을 수차 건의했음에도 현행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2011년 개정 이후로 사용료가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음. 현행 조례에 규정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면 체육관의 경우 시간당 4,000원, 그리고 잔디 운동장의 경우는 시간당 8,0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중간의 위치에 있으나, 경기도·강원도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고 부산, 인천, 울산, 대전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기타 시도에서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충남만 감면규정이 없는 실정임.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타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람.

A4 2011년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경우 20%를 누구나 관계없이 일괄 감면함.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고 있고, 이중에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50%를 추가로 감면하고 있음. 다만 동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 학교 측과 계약이 되면 읍면지역 사용자와 똑같이 50%를 추가 감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향후에 동지역 주민들도 장·단기 구분 없이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이기철 의원

Q1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8개 시·군에 10만3,673㎡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63개 사업에 6,404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임. 예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문화 창달부문 6개 사업, 역사문화 유적정비부분 41개 사업, 관광휴양시설 확충부분 6개 사업, 기반시설 확충부분 10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완료된 사업은 서산 박첨지놀이 전수관 등 16개 사업이고 역사문화 정비부분의 장항선 관광열차 사업은 재검토 중이며, 아산 공세 꽃고지 발굴정비사업을 포함한 11개 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음. 2016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역사문화 유적정비 부분 41개 사업 중 서산 보원사지 정비 등 15개 사업에 총 218억 6천 6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음. 지금까지 2004년 사업개시 후 13년이 지났는데 투자금액은 총 3,492억 6천 6백만 원으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총 2,911억 6백만 원을 투자해야 됨. 앞으로 4년간 매년 7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야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음. 내포 문화권 종합 개발 사업지구에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A1 내포문화권역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림.

Q2 현충사를 방문할 때 입장료가 있을때는 2백만 명 가까이 방문객이 몰렸는데 관광의 패턴이 변하여 보는 관광에서, 직접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변화한 후 입장료를 폐지해도 방문객이 대폭 감소하여 50만 명도 채 안됨. 경남 진해, 고성, 남해, 통영은 실물 모형의 거북선을 임진왜란 전적지에 전시하여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음. 현충사 부근에 임진왜란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실물 모형의 거북선을 전시한 후 승선객

들에게 4D의 입체 영상을 통하여 직접 충무공이 되어 왜적을 궤멸하는 영상체험을 하게 한 후 충무공이 입던 갑옷도 입어보고 큰칼도 휘두르고 말도 달리고 활도 쏘아보고 병사들이 먹던 주먹밥도 먹도록 하면 수도권 2,000만 명 인구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질의를 하였더니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민자라도 유치하여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A2 임진왜란 파크사업을 비롯한 현충사 주변의 관광 자원 개발사업의 문제는 아산시가 현재 하고 있는 은행나무길이나 곡교천 개선사업을 현충사와 연동하여 정비를 하다보면 그 속에서 상업적 투자 여건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함. 그런 관점에서 아산시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음. 구체적인 현충사를 기반으로 한 투자유치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산시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림.

Q3 일본 나라현의 이치조고등학교 후지하라 가즈히로 교장이 “앞으로는 정답이 아니라 납득답(납득할만한 답)을 내놓을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학교가 정답 가르치는 것은 시대착오이고 동기와 용기를 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햄버거 가게 개업해 돈 벌려면? 어떻게 살건가?” 같은 주제로 토론을 시키라는 요지의 기사를 보았음. 이제 곧 한국도 성숙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됨. 성숙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람.

A3 충남교육청이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참학력이라는 부분이 가즈히로 교장이 얘기하는 부분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하고 있음. 참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교과서 중심으로 습득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재생산해 내고 자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임. 그렇게 해서 민주적 시민성과 감수성·인성 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까지 함께 길러 나가면 가즈히로 교장이 얘기하는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임.



김 연 의원

Q1 최근 충남도는 2016년 7월 중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위탁운영하겠다는 계획임.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장애인에 비해 발달장애인은 사회 적응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환영할 일임. 그러나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현재 충남도립장애인복지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과 일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바임. 발달장애란 신체 및 정신이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정도 뒤쳐져 발달한 경우를 말함. 현재 충남의 발달장애인은 11,36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1%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발달장애인의 수는 9.1%에 불과하지만 도립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의 과반수 이상은 발달장애인임. 반대로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가 넘는 52.8%의 지체장애인은 17.1%만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음. 이처럼 도립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과반수가 발달장애인인 이유는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직업재활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등 각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전문화로 인해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임.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충남도립복지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임을 고려한다면 두 기관은 분리되어 존립할 것이 아니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법률에 의해 센터 설립이 불가피 하다면 복지관 내에 센터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람.

A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도립복지관에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 도립복지관으로서 기능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와 더 나아가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새로 설치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기존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Q2 장애인 복지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립 및 각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사업과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민간 법인단체의 사업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보임. 이러한 현상은 충남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 매 순간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거름 없이 이양받아 운영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생각함. 또한 각 장애 유형에 따라 독자적인 활동 범위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다시 말해 시군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도립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추진도 시군 재정의 어려움으로 쉽지 않아 보임. 단위 사업장의 실효성도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공동생활 가정 형식의 생활시설이 각 분야별로 생겨나고 있음. 4~10명 정도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의 운영비는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2억 4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 곳이 있음. 또한 H기관은 매년 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해당 기관의 이용자는 불과 20여 명이며, 상담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상담일지도 없는 상태이고 정보화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사업 내용은 중앙에서 만들어낸 리플릿을 몇 천장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음.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 성격의 센터들도 대부분 소규모이다 보니 실제 상담과 훈련을 거쳐 사회복귀까지 완결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 예로 사회복귀시설을 들 수 있음. 충남도내에 총 24개소가 있으며, 269명의 이용자와 72명의 종사자가 생활하고 있음. 투입되는 예산은 30억 원이며 이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사회복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정신치료적 도움임. 그러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사회복지사가 이들의 병원방문과 약복용을 돕고 있음. 시설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임.

관리감독의 부재하에 정체성도 모호한 단체의 난립, 당초 취지와 설립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도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충남도는 하루빨리 충남 장애인 복지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비사업을 서둘러 장애인 복지 분야의 무질서한 양적 팽창 막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A2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본연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에 도 광역정신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시설 프로그램 전반을 점검하여 입소자들의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음.

Q3 올 초부터 천안 백석동에 위치한 환서초등학교는 과밀학급, 과대학급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은 물론 교사의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임. 이에 따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원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환서초의 이러한 문제는 인구유입에 따라 학생들이 증가하고 애초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노석초등학교 신설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연기되면서 나타난 문제임. 어제 가까스로 그동안 늦어졌던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에는 노석초 개교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음.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시공이 한 달 정도가 연기되었는데 그래도 개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지, 이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석동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최소한 8월 이전에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A3 노석초에 대한 공사를 7월 중 착공해서 내년 9월 1일 개교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빠르면 6월 하순 또는 7, 8월 중에 학부모님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거쳐서 백석동 일원에 통합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최선의 해소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정광섭 의원

Q1 해안국립공원구역은 일부 해제해서 해안국립공원 속에 사는 도민들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 태안군은 아름다운 절경과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약 530여 km임. 그동안 수십 년째 해안가와 바다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말 그대로 자연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었지만 지역에 사는 현지인들은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고 살아야만 했음. 태안군은 크고 작은 항·포구가 41곳, 해수욕장이 31곳이나 되지만 국립공원에 묶여 숙박이나 편의시설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태안군을 찾는 관광객들도 불편하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와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자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태안군과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함. 드디어 2010년 일부 해제가 되어 나름 해제된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잘 활용을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도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불편함과 재산권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2020년에 다시 국립공원 재조정 할 계획이라고 함. 충청남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전수조사를 하고 2020년에 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국립공원에서 해제시켜 내 땅에서 정당한 허가절차를 받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기 바람.

A1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 우리나라 제13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음. 공원구역에서는 실제 각종 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생활상의, 재산 운용상의 불편함이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임. 공원구역 해제 건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정기적인 계획변경 시기에 공원 구역 편입과 해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음. 태안해안국립공원은 2011년도 공원계획 변경으로 원북면 방갈리 지역 등 27개 지역 중에서 22개 지역이 해제 되었고, 5개 지역은 현재 공원구역으로 존치되고 있음. 현재 도에서는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는 환경부 소관 사항이어서 직접 추진하기는 어려움. 다만 2020년 태안해안국립공원 변경계획 일정이 잡혀있어서 이 과정 중에 추가적인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태안군과 함께 준비를 해 나가겠음.

Q2 해안국립공원에서 제척된 해수욕장 내 · 외지역과 항포구 내 · 외지역 임야 내 농림지역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용도변경을 요구함. 2010년에 해안국립공원에서 일부 해제가 되어 2011년 1월 10일 해면부 5.312km², 육지부 9.241km²가 해제 고시되었고, 그중 육지부 3.835km²가 보전산지로 되었음. 그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했던 주민들은 국립공원 해제를 좋아했음. 2013년 12월 30일 용도 지역변경고시가 됨. 물론 육지부 9.241km² 중 보전산지를 제외한 5.406km²는 용도지역에 맞게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고시되어 나름 잘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보전산지와 임야 내 농림지역임. 바닷가 해수욕장, 항포구와 접해 있으면서 농림지역으로 있다는 것임. 농림지역은 전문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음. 또한 농가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2채 소유가 안 되고 면적도 제한됨.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곳이 태안군 항포구나 해수욕장지역이 농림지역임. 마구잡이 개발 즉 난 개발은 반대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한 곳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함. 또한 국립공원지역이었을 때 공원지역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할 수 있도록 즉 공원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취락지역이 있어 건축물 60%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서 그런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해제됨으로 인해 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것임. 물론 충남도에서 보전산지 및 임야내 농림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안군 및 산림청과 농림식품부에 협의하여 그 지역에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해수욕장 내 · 외지역과 항포구 내 · 외지역의 농림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함. 국립공원 해제 지역이 아니라도 현재 해수욕장 내 · 외지역 그리고 항포구 내 · 외지역이 농림지역이 대부분임.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임. 규제라는 틀 속에서 수십 년간 억압받고 사는 도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역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해줄 것을 촉구함.

A2 2011년도 당시 일부지역이 해제됐을 때 이 중에서 일부 임야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었음. 이어서 지난 2012년, 13년 산림청에서 공익용 보전산지를 임업용 보전산지로 변경하였고 일부 해제해서 재분류한 바도 있음.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우선적으로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를 먼저 해제하여야 함. 이는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우리 도가 직접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산림청에서는 2018년도를 목표로 산지구분 정비작업을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시에 산림청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맹정호 의원

Q1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된 지 21년 이 흘렀음. 사람의 나이로 치면 청년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음. 2015년 11월 행정자치부가 공시한 전국 252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4%, 시·군·구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각각 31%, 11.6%, 25.7%임. 충남의 경우는 어떨까. 충남도 본청의 경우 26.05%이며, 전국 평균을 넘는 곳은 기초자치단체는 단 두 곳으로 천안시와 아산시 뿐이며 나머지 모든 시·군은 평균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지방자치가 계속 될수록 자치단체의 체력은 더 약골이 되고 있음. 진단과 처방과 치료가 필요함. 그러나 요즘 중앙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정책들은, 숨넘어가는 환자에게 호흡기를 쫓는 수준밖에 안된다고 생각함.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조정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전액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의 기준을 현행 인구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에서, 인구수는 10%를 낮춘 40%, 재정력은 10%를 높인 30%, 징수실적 30%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임.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세원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임. 이 개혁안을 2015년 충남도에 적용하면 약 735억 원의 변동이 발생함. 아산은 334억, 천안은 250억, 당진은 89억, 서산은 62억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다른 시군의 경우 735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게 됨. 충남의

시군 간에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음. 이 희비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음. 서천군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농 간의 격차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함. 태안군은 “최근 정부의 계속된 지방비 부담시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함. 반면 아산시의회의회는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음. 정부가 내놓은 줄속적인 정책으로 인해 사이가 좋았던 지자체 간에 싸움이 붙고 있음. 정책이 좋고, 그르고를 떠나 이런 정책을 지자체와 상의 없이, 이렇게 쉽게 추진하는 것을 보며,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살림살이가 열악한 자치단체에게는 교육경비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정부를 보면서 참으로 쉽게 일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임. 현재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문제는 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인데, 정부의 정책은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들끼리 식은 죽을 나눠 먹으라는 식임. 어려운 자식들을 놓고 자신은 뒷짐만 진 채 자식들끼리 지지고 볶으라는 매정한 부모를 보는 듯함. 아무런 문제 해결 능력도 없는 부모를 보는 것 같아 오히려 안타까울 뿐임.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세원 구조를 개선해야 함.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인 반면 재정지출 비율은 4대 6 수준으로 구조가 고착화 되었음. 우리나라 지방세 비율은 2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40.9%의 절반 수준임. 한 예를 든다면,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에 소재한 석유화학 기업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이 약 4조 원이 조금 넘는데, 이 중 국세가 4조 원 이고, 지방세는 전체 세금의 1%도 되지 않는 400억 원 정도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함.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음. 그러나

국가의 지방이전 재원에 대한 증액 논의 없이,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 방식만 변경하는 것은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음. 국가의 추가 지방세 전환과 교부세율 인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물론 충남도가 무능하고 매정한 정부처럼 못된 큰 형님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님. 어려운 동생이 있으면 도와야 하는 게 인지상정임. 충남도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에 앞서 지역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1기 사업에 4,452억 원을 투자했고 2013년부터 시작된 제2기 사업에 4,717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가 충남도를 배웠으면 좋겠음.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함. 정부는 정부답게 정책을 펼쳐야 함. 도는 도답게 일해야 함. 시·군은 시·군다울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은 큰 파도를 헤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정부답지 못하면 국민의 삶이, 나라의 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음. 중앙정부로 인해 충남도와 일선 기초자치단체 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음. 못난 부모에 못난 형이 되지 않으려면 충남도가 정확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함.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충남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A1 국가재정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양을 늘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파급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음. 그런 상태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전략회의라는

이름으로 지방재정개혁을 다루는 데에는 바로 그 한계가 그대로 적용되게 됨. 그런 점에서는 이 논의가 유감스러움. 이 논의는 사실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가운영의 큰 철학들이 같이 수반되어지지 않는 이상 지방재정전략회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집안싸움이 되기 쉽기 때문임. 지방재정의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게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와 우리 도의 이름으로 수차례 제안했던 것처럼 지방소비세라든지 일반교부세 비율을 상향시키고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촉구할 계획임. 우리가 자치단체를 운영한 것이 1995년인데 그 당시에 전국평균 재정자립도가 64%였다가 20년이 지난 현재 44%, 약 20%가 다운되었음.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도시와 군 단위 그리고 수도권 일부 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유발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잘 하고 있는 쪽의 수준에 아래쪽을 맞춰줄 생각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단체에 나머지 단체의 갈등을 붙이는 쪽으로 재정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개혁정책의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함. 시·도지사협의회와 논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을 높이는 쪽의 안을 활용하면 이번 재정개혁안은 긍정성이 있음. 시·도간에 약간의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 속에서 불균형, 불균등,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큰 차원에서 부분적인 개혁안을 써보자고 행정자치부장관께 건의하고 20대 국회에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임.





5분 발언



신재원 의원
[본회의 2016. 5. 10.]

충남 서남부 지역 균형 발전 촉구

- 지역 간 균형 잃어 낙후와 발전 격차 벌어질 가능성 주장
- 서남부지역 낙후 속도 빨라지면서 지역 간 균형 벌어져... 젊은 층 이탈 등 지역감정 불씨

보령시 인구 현황을 보면 2007년말 10만 8천명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어 2015년도말 10만 4천명이며 2016년도 당초 예산 기준 재정 자립도는 13.8%에 불과한 상대적으로 약자이자 낙후지역임. 보령의 현 실정은 서천-보령간 국도4차선 확장 공사는 수년째 공사 중이며 국토의 중심인 대전에서 보령까지의 고속도로는 당진을 거치거나 서천을 거쳐 빙글 빙글 돌고 돌아야만 도달하는 곳으로 오지중의 오지이며 보령머드축제는 날로 그 명성을 더하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일시적인 축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바 그 어느 때보다도 배려와 관심이 중요할 때임. 경기도와 인접한 충남 북부지역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충남 서남부의 발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면적은 넓지만 재정은 빈약하고 넓은 대륙으로 갈 수 있는 바다는 있지만 바다길은 아직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타 시·군과 타 시·도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의 장이고 대화와 문화교역의 창구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음. 지난 2014년 11월 25일 제27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보령신항의 융·복합형 개발촉구 및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우리지역의 보령신항을 중심으로 이 지역 항만이 서해안 환황해경제시대에 항만으로서의 발전전략을 관철시켜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1년 반이 지났건만 보령신항개발 움직임은 그 어떠한 미동도 없음. 낙후지역의 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충남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령신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림.



홍성현 의원
[본회의 2016. 5. 10.]

도내 생존수영교육 수박 겉핥기식

- 예산지원 원활하지 않은 데다, 수영장 협소하거나 열악해 학생 수용 어려워
- 전남, 전북, 강원도 등과 견줘 충남 학생수영장 시설과 환경 최하위... 전반적 검토 촉구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정부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자기 생명보호 능력 강화를 위해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지금까지 생존수영교육을 위해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예산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에서는 2015년도에 아산, 금산에서 총 6천6백만 원, 올해는 금산, 서천에서 총 5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정부보조금과 교육청 또는 학교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음.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명목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듯 충남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에 지자체의 지원이 미약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혹여 재원확보를 위한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장님들의 활동과 열의가 부족해서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음. 더욱이 일부 학교지만 학교예산 반영없이 수익자 부담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 신청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그리고 생존수영교육은 특정학년이 아닌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도교육청

과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자체의 시설 활용 방안 대책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관용차량 지원 등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지 묻고 싶음. 교육부 자료 2015년 6월 기준, 시·군·구별 공공수영장 현황에 따르면 충남은 21개로 초등학생 115,484명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 도와 비슷한 여건인 전북은 23개소, 전남 25개소, 강원도 30개소에 비하면 우리 충남은 열악한 실정임. 그리고 이 중 학생수영장은 8개 지역 11개소로 수영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너무 미약함.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천안의 초등학생은 3만 8천323명인 데, 공공수영장은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1곳 뿐임. 하물며 다른 시·군에는 학생수영장조차 없음. 이러한 시설환경에서 어떻게 생존수영교육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충남의 11만 5천 명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은 물론 210만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한 수영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봄. 특히, 천안의 경우는 수영장 신축과 관련 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더욱 시급함.



서형달 의원
[본회의 2016. 5. 10.]

충남 자연 생태 환경 가꾸기 위한 제언

- 국립공원과 국립생태원 등 수많은 자연 자원 활용한 여가선용 이끌어야
- 생태 시설 발굴 및 교육 병행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만들 것 제언

도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자연 생태 환경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첫째는 우리 도는 태안해안국립공원, 계룡산 국립공원, 칠갑산, 대둔산을 비롯한 도립공원과 서해안 갯벌, 철새도래지 등 수없이 많은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데 이러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탐방 또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금년 10월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됨. 이 시기에는 우리지역을 찾는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을 것임.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지를 적극 조성하여 국민이 다시 찾는 우리지역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림. 요즘 사람들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힐링과 여가선용을 위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쾌적한 생태관광지를 찾는 추세이며,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함. 이에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 루트 개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 두 번째는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임. 서천의 경우에는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조류생태전시관, 신성리 갈대밭, 서천갯벌이

있고 특히, 유부도의 경우에는 검은머리물떼새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중요한 자원이자 생태유산의 보고인 지역임. 우리 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러한 생태자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서천 뿐만 아니라 충남 전지역의 생태지역을 활용한 생태체험, 힐링 및 여가선용 공간 등의 생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우리지역을 국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임. 아울러 2023년에 서천지역에서 생태환경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길 당부드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환경인식이 습성화되도록 어려서부터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충청남도에서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세부실천계획 수립과 중장기적인 환경 교육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전낙운 의원
[본회의 2016. 5. 10.]

폐교부지 활용 촉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 일부 폐교 사익 추구 시설로 전락, 도교육청 강 건너 불구경하기 식... 책임소재 밝혀야
- 교육감이 직접 나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계획 주민에게 설명 거듭 요구

3년간 끌어온 논산시 연무읍 봉동분교 폐교부지 태양광발전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또 섰음. 제285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과 끝장토론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그동안 KBS1과 TJB 등 방송매체에서도 현지취재를 하고 폐교부지 처분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한 바 있지만 교육청은 전혀 답을 주지 않고 있음. 이해당사자 모두를 모셔놓고 교육감이 본 의원과 끝장토론을 할 수 없다면 다음 3가지 사항의 착실한 이행을 거듭 촉구함. 첫째, 교육감이 향후 이행계획을 주민들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람. 특별법은 폐교부지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교육감에게 부여하였지 실무 담당관에게 준 것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계자를 앞세워놓고 책임을 방기하거나 뒤에서 조종이나 하는 비겁하고 비굴한 업무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예우를 차관 이상으로 격상해달라는 교육감도 있지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섬김의 대상인 국민을 무시한다면 누구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호사스런 사무실에서

비서의 대접을 받으며, 기사가 운전하는 좋은 차를 타고 호가호위하느냐 말임. 저 또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몇몇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임. 둘째, 처분해야 될 폐교가 산적하고 향후 발생될 폐교가 더 있다면 금번 사태를 교훈삼아 “폐교부지 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함. 셋째,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한 인사 처리를 요구함. 매각 이후 주민들이 교육지원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하여 민원을 야기해 놓고 변명만 늘어놓던 관련자 처분은 커녕 영전을 하였다면 이것이 클린 교육행정이라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음. 또 하나마나한 감사로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교육풍토를 방조해온 관계자의 용퇴를 다시 한번 촉구함.



장기승 의원
[본회의 2016. 5. 10.]

도와 도교육청 지속적인 상생협력 당부

- 11년간 풀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해결
-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용단에 갈채... 협력과 상생 강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간 오랜 기간 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학교용지부담금 373억 원을 충남교육청에 전출키로 한, 도지사의 용단과 교육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림. 또한, 걱정과 염려로 충남교육을 고민하고 11년 여간 해묵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문제와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림. 지난 2003~2013년까지 약 11년간 충남도가 도교육청에 미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 373억 원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전출한다면, 도교육청도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최근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미 부담액을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으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앞당겨서 전출하는 시·도가 늘고 있는 데, 충남이 선도적으로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2016년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시 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1년분 약 1,073억 원 중 6개월분 536억

원을 다른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교육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이번 충남도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조기 전출 결정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에 여유를 주었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37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충남도의회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 심의시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교육감의 재의 요구도 있었지만,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잘 처리해주셔서 어린이집 학부모와 아동과 관련한 보육대란의 사태까지 가지 않은 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함. 도청과 도교육청은 변화하는 교육에 맞는 신교육 혁신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교육전문가, 교육기관·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교육발전 협의회와 교육행정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충남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상생해 나갈 것을 당부드림.



김원태 의원
[본회의 2016. 5. 10.]

통일의식 높이는 시책 마련 시급

- '통일교육지원법' 제정됐지만, 지자체와 교육당국 안보의식 담은 통일교육 뒷짐
- 미래세대 통일 무관심 통일의지 약화로 경제적 손실 볼 보듯... 통일 기초적 기틀 잡아야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인하여 남북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어 긴장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보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해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함. 특히, 통일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민의 단합된 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참여가 관건이라고 생각함.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통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통일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며, 더구나 통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통일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통일의 정신적이고 기초적인 토대가 확립된다고 봄. 이에 정부에서도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통일교육센터(15개소)를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최근 3년간 통일교육 관련 예산지원이라든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과정 개설 등을 파악해 본 결과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해 미래세대청소년 통일교육지원을 위해

불과 2천만 원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음. 특히, 「통일교육지원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과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는 통일교육과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충남교육청의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일·안보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별 정규교과 및 학교장 훈화 등을 통한 호국·안보교육 실시, 나라사랑을 위한 병영체험 실시, 통일교육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통일교육도 추진한다라고 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현실로 인해 통일·안보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형식에 차 맞추기만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음. 안보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미래지향적 통일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과정 반영과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맹정호 의원
[본회의 2016. 5. 19.]

대산공단 해수담수화 예타면제 건의

- 대산 공단 대규모 공장증설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용수 절대 부족
- 정상적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경우 용수공급 2022년 이후에나 가능

현재 대산공단은 아산공업용수도를 통해 하루 11만 9천 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고 당진 대호지에서 16만 9천 톤을 취수해 사용하고 있음. 문제는 공장의 증설과 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으로 공업용수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임. 수자원공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내년의 경우 하루 5,200톤의 물이 부족하고 2018년에는 1만 4,700톤이, 2019년에는 6만 5,700톤이, 그리고 2020년에는 8만 7,700톤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늘어나는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수원을 확보하고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담수자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임. 대호지는 농업용 저수지로서 2012년 가뭄으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었으며 수질도 5등급으로 매우 낮음. 삽교호의 수질도 매우 나빠 공업용수로 사용이 어렵고, 아산호의 경우도 공업용수 공급이 포화 상태여서 추가 취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해수담수화 시설임. 충남도에서도 중앙정부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음. 해수담수화 시설은 대략 2,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임. 예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함. 그렇게 된다면 2020년에나 설계가 되고 2022년 이후에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공단 가동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기획재정부의 '2015년 예타운용지침'에 따르면 '재난예방 또는 긴급한 경제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사처럼 대산공단 해수담수화 시설도 예타 면제를 받아야 함. 그렇게 된다면 2019년부터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됨. 대산공단은 연 매출이 41조원이 넘고 국세가 4조원에 이름. 그러나 국가공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음. 국가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대산공단을 위해 정부가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대산공단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충남도가 더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담수화시설과 예타 면제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조이환 의원
[본회의 2016. 5. 19.]

구제역·AI 발생에 따른 보상비 매년 300억원

- 지난 6년간 구제역과 AI로 인한 보상액 1,794억여 원 혈세 투입... 초소 운영 및 약품비 제외
- 가축 전염병 발생 막대한 피해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 제안

우리 도에서도 해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 2011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도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 513,107두가 살 처분 되었고, 1,490억 2,23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음. 조류인플루엔자로 가금류 33억 8,786만 마리가 살 처분되었고, 304억 3,34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음. 방역에 따른 초소운영이나 약품구입비 등을 제외하고도 6년 동안 매년 약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었음.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가축의 이동제한과 육류소비 위축, 수출제한 등으로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는 침체되었고, 살 처분과 매몰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축산인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시달려야 했고, 매몰로 인한 침출수는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음. 그래서 방역당국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세기 말 미국을 비롯한 환경선진 국가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온 인체에 무해하면서 모든 오염물질을 분해, 살균, 소독할 수 있는 천연물질인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최근에 국내연구진들의 오랜 연구 끝에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함. 또한 가축농가에 시험 적용한 결과 악취제거는 물론 전염병예방에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함. 이처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음. '하이드록실 라디칼'연구 개발자는 개발물질생성시스템을 충남도내의 가축사육농가에도 이미 시험 설치하여 사용한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은 물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제거에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음. 우리 충남도의 해당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가축위생연구소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말 효과가 입증되면 조속히 충남도내 가축사육농가에 보급해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특단의 방역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함. 그렇게 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지역 가축 살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충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경쟁력 확보는 물론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함.



이공휘 의원
[본회의 2016. 5. 19.]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융복합광장 조성 제안

- 주변 연구소와 대학, 기업체 등 연계 통해 아이디어 구현 가능한 마당으로 변모해야
- 주변 13개 대학 산학협력 공급 가능... 충남 북부지역의 첨단산업벨트로 성장해야

2014년 9월 25일 5분 발언을 통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했고, 2016년 2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심의하고자 했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반대에 동의 하였음. 제안했던 것을 스스로 번복한 것은 첫째,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활용방안 진행 과정, 국비 반환 후의 계획, 200억 이상 되는 리모델링 및 보수비용 확보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도 없다가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연구용역은 속도감이 떨어지는 행정임. 둘째, 14년 9월 이후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인 SB플라자와 이차전지인증센터도 충남테크노파크 안에 입주 예정이고, 26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이 직산에 입주가 확정되었음. 셋째, 산업인력 공급면에서 살펴보면, 천안과 아산의 대학교는 13개에 산학협력단이 11개 학교에 있음. 학생 수는 자그마치 13만 461명에 달함. 이 학생들 중 충남에서 비전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1년에 5천명씩 이탈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음. 충남 전체 대학생 21만2,176명에서는 더 많을 것임. 그리고 충남TP에서 2014년도부터 시작된 충남청년창업학교에서는 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122명의 고용과 41억 9천 5백만원의

매출실적을 내고 있음. 넷째, 접근성면에서 보면 반경 5km안에 북한안IC와 천안IC가 있고, 20분 내로 천안종합터미널, 천안역,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 IC에 도착할 수 있음. 또한 천안 서북~성거 국도 우회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 1호선과 직접 연결될 수 있고 천안의 신도시에서 15분, KTX 천안 아산역에서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함. 수도권에서도 1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음.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포함하는 충남 북부지역의 첨단산업벨트를 만들 것을 제안함. 수소연료전지차부품산업, 이차전지인증 및 관련 산업 등이 발전될 것임.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임. 천안, 아산, 예산에 흩어져 있는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합시키는 것도 한가지 예라 할 수 있을 것임. 결론적으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정형화된 H/W적인 요소를 모아 놓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광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중장년부터 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숨소리와 창의적인 열정이 모여 있는 활력 넘치는 공간.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공간.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일을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가동되기를 바램.



김 연 의원
[본회의 2016. 5. 19.]

정부 맞춤형 보육정책 누리과정 전초전 되나

-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 시 운영비 20% 삭감... 고스란히 지자체와 운영자 몫
- 보육 질 떨어지고 전업주부 자녀 이용 거부하는 사례 불 보듯... 철저히 촉구해야

맞춤형 보육이란 영아들의 안정적 애착 형성을 돕기 위해 전업주부 자녀의 종일반 이용을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 미만으로 제한하여 단축, 축소토록 하는 제도임. 제도의 취지라면 본다면 환영 할 만함. 그러나 이를 시행하면 보육료를 20% 삭감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현재 평균 원아 수 15명 기준의 운영비 수입 총액은 약 8백8십만 원임. 지출은 인건비로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도 최저 5백9십여 만원이고, 급·간식비, 냉·난방비,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 등등의 지출비는 2백30만 원으로 총 8백20여만 원임. 60만 원 정도가 잉여금임. 그런데 이번에 맞춤형 보육제도가 실행된다면 이것마저도 어렵게 되어버림.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약 54%, 아이를 출산한 경우 25%대로 떨어짐. 이를 고려한다면 현재 원아 중 약 10명 이상은 맞춤형 보육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보육료의 20%가 삭감되어 지원을 받게 됨. 단순계산을 해도 약 100~130만 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줄게 됨. 이제 완전한 마이너스 경영임. 원아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교사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같은 비율로 줄지 않음. 한 어린이집에서 일부 원아가 8시간 보육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교사도 근무시간

을 단축할 수는 없음. 나머지 일부 아이들은 12시간 보육을 해야 함. 또한 아침저녁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20% 줄일 수도 없고, 교재교구를 누구한테는 20% 줄여서 제공할 수도 없음. 마이너스 경영은 할 수 없으니 운영비를 줄이던가 원아를 선택해서 받을 것임. 현재 충남의 보육료는 정부 고시 표준보육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충남도에서 보육료 차액을 29,500원~57,400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음. 만약 맞춤형 보육제도로 인해 기존의 방식처럼 지자체에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면 170,000원~130,000원까지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 재정을 더 악화시키더니 이제는 영유아 보육료마저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전초전이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가 됨. 이미 이제도는 작년에 시행사업을 거쳐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데에 아무런 이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실행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줄 것을 충남도에 촉구함.



김명선 의원
[본회의 2016. 5. 19.]

도내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해야

- 화력발전소 25기(75%)에 달하지만 미세먼지 측정기 3기에 불과... 도민 안전 경고 등
-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충남 배재... 발전소 오염 물질로 750명 조기 사망 결과 나오기도

지구 온난화의 황사문제에서 비롯한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충남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또 하나의 사실이 보고되어 충격을 더해 주고 있음.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공기와 반응하여 초미세먼지를 만들고 이는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고 28% 영향을 미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것임. 우리 충남에는 25기의 화력발전소가 있음. 이는 전국의 47%에 달하고 신규로 세워지고 있는 20기 중 9기가 충남에 집중되어 있음.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충남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750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임. 특히 당진화력 9, 10호기와 당진 에코파워 1, 2기가 건설예정인 당진에서 가장 많은 조기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음. 사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는 우리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대기오염물질 조사·연구사업과 대기 관리 강화

사업을 통해 발전소 주변 환경관리 강화에 나서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음. 또한, 당진시, 보령시 등 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환경해권 행정협의회'에서도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피해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함. 이와 함께 우리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도내 3기에 불과한 초미세먼지 측정망 도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도민에게 미세먼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충남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에 줄 것을 촉구함.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발전소 건설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우리 충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외면한다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임.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도가 먼저 나설 수 있도록 관심을 높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함.



이종화 의원

[본회의 2016. 6. 1.]

각종 건설 산업 지역 업체 및 자재 사용 외면

- 도 발주하는 공사임에도 도내 자재 구매율 60~70%에 불과... 외부업체 눈독
- 타 시·도 지역 업체 우선 사용...금액으로 환산하면 26억 중 10억원이 도외 업체 제품

우리 도 종합건설사업소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2016년 자재구매 현황을 분석해보면 4대 관급 자재를 제외하고, 총 31건 중 22건이 도내 자재이고, 9건이 도외 자재로 조사되었음. 하지만 금액으로 구분해 보면 총 26억 8,855만 원 중 62%에 해당하는 16억 7,097만 원이 도내 자재 구매 금액이고, 38%에 해당하는 10억 1,757만 원이 도외 자재 구매 금액임. 충남도에서 발주하고 충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자재 구입이 60~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90% 이상은 지역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른 시·도에서는 자기지역 건설자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건설기술심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과정에서도 자재구매 품목에 대한 자재생산

지역 현황을 받는다고 함. 이렇듯 설계과정에서부터 지역 건설자재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임. 이런 노력들로 인해 타지역 건설자재업체의 계약이 거의 불가할 정도라고 함. 최근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건설관련 업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 지역의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임. 우리지역에서 발주하고, 우리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이든지 우리지역의 자재와 인력을 활용해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이용호 의원

[본회의 2016. 6. 1.]

무분별한 지역 축제 정확한 검증과 통폐합 시급

- 홍수처럼 불어난 지역 축제 대동소이... 성과 포장하기에 급급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 전문가 컨설팅, 특성있는 프로그램 개발, 통폐합 등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 뒷받침돼야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부터 지역향토문화 축제가 지역마다, 계절따라 지나칠 정도로 열리고 있음. 문화축제이던 산업축제가던 지역마다 특성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훌륭한 문화상품으로 다듬어 발전시킨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일이지만, 문제는 다른 지역의 행사와 차별화되지 못한 축제, 심지어는 지역 내의 다른 축제와도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하여 판박이 식 소비성 축제라는 지적을 받기도 함. 지역마다, 향포구마다 앓다 투어 개최하고 있는 축제에 설상가상으로 행사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을 초청하여 치러야한다는 잘못된 인식하에 자치단체장들은 행사철만 되면 이곳 저곳의 행사장을 찾아다니기에 바쁜 하루 일과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각각의 축제마다 먹거리 장터, 노래자랑, 예술마당 등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행사장을 무대로 찾아드는 잡상인과의 지역 상권 다름 등을 비롯하여, 기관 단체장이나 일부 특정 인사들을 초청하여 함께 어울려 먹고 즐기는 연례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등의 안타까움 속에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관심마저도 낮아지고

있음. 새해를 첫출발하는 해돋이 행사만 보아도 지역마다 제 각각 개최하고 있음. 심지어는 1개 읍면 내에서도 같은 날 여러 곳에서 꼭 같은 행사를 갖기도 함. 또한 자치단체에서 행사비를 보조해주고 있으니 이에 질세라 우리지역에서도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단일한 판단 아래 무조건 벌이고 보자는 식의 축제가 허다하게 열리고 있음. 이러한 행사는 한마디로 주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접고서라도 그 축제는 성공하지 못할 것임.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여건과 행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그 축제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축제가 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이미지 홍보는 물론, 축제다운 축제로 자리 매김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역축제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특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통폐합의 필요성 여부 등등,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행정적 지원기준 설정과 함께 행사의 발전방향 제시 등 행정지도의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김응규 의원
[본회의 2016. 6. 1.]

박정희 전 대통령 별장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해야

- 1970년대부터 애용하던 아산시 도고면 소재 별장… 침구와 각종 유품 등 보관
- 타 시·도의 경우 생가와 별장 역사적 가치 인정하며 도 지정 문화재로 관리·보존

1948. 8. 15. 초대 대통령으로 3대에 걸쳐 역임한 이승만 대통령 이후 4대 윤보선 대통령, 5~9대의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1분의 대통령이 탄생되었음. 세계 제13위 경제대국과, G20 국가의 하나로 만든 주역들이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임. 세계 13위 경제 대국의 기초를 놓고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 별장이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70년대에 충청권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사용함. 대지 4,600㎡, 건물 330㎡의 단층 건물로 박대통령 재임시 머물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곳임. 또한 이충무공 기념 행사에 참석하신 뒤 휴식을 취하신 곳이기도 함. 1979년 10월 29일 삼교천 방조제 제방식을 끝내고 도고 온천의 이 별장에서 온천욕을 하신 후 상경. 서거하시기 몇시간 전까지 머물렀던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고, 그 가치 또한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문화유산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음. 이 별장에는 조국 근대화와 우리 민족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킨 새마을운동의 상징적인 물건인 당시의 리어카와

주방기구, 서책, 침구, 친필회화, 하사품 등 유품 100여점과 가족사진 등 70여점이 보관되어 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별장은 민간 소유건물이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경상남도는 1990년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승만 별장을 유형문화제 제265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있는 별장도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제 제113호로 관리하고 있음. 경상북도는 1993년에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경북기념물 제86호로 지정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런 문화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통령 별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후손으로서 무책임하다 할 수 있으며,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또한 민간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를 한다면 이 또한 민간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선 매입후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조이환 의원
[본회의 2016. 6. 17.]

우후죽순 태양광발전시설 ‘갈등의 씨앗’

- 도내 총 3,745개소 허가… 법망을 피한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건강 침해 등
- 2011년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 의무 할당 변경…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과 마을주민간의 충돌은 정부가 2002년 도입하여 시행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11년 의무할당제로 정책을 변경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임. 이 제도로 가정이나 마을 등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시민발전소, 마을 에너지 사업, 시민 출자형 태양광협동조합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이 실현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2011년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의무할당제로 변경했음. 공급의무자 범위는 설비규모 500MW이상의 한국전력 6개 발전 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 파워 등 13개 발전회사들이며, 국가 총 발전량의 98.7%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 발전소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전문 생산업체로부터 공개 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있음.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십 곳의 대형 태양광발전 사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음. 그 결과 가정 뿐 아니라 소규모 업체는 이들과의 경쟁에 끼여들 여지가 없게 됐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태양광 입찰 결과

경쟁률이 무려 10대 1에 달했고, 평균 낙찰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37%나 폭락했음.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이들 사업자들은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산지나 농지 등을 매입하여 전용허가를 얻고, 무분별하게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5,000㎡ 이상의 토지 개발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사업대상지를 5,000㎡ 미만으로 분할하고, 사업자명의를 달리하여 분할허가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음. 또한 해당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얻기 위해 첨부해야 할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마을 이장 등 몇몇 사람들에게 파고들어 불법을 자행하고, 마을전체 의사인양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처에서 사업자와 마을 주민들 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현행 의무할당제를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전환을 강력하게 건의할 것과 청정지역의 산과 들의 나무가 잘리고, 땅이 파헤쳐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일선 시군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함.



김원태 의원
[본회의 2016. 6. 17.]

도 균형발전 정책 재조정 촉구

- 재정자립도 열악한 계룡시 등 지역균형발전지원에서 배제...용역 실효성 지적
- 계룡시의 경우 군사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45% 달해...세수 부족 등 자원 시급

정부에서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충남도에서는 2007년 3월 30일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의 지원대상지역을 공주시를 위시하여 8개 시·군으로 한정하여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기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54개 지구에 총 4,452억 7천9백만 원을 투자하였음. 제2기 충청남도 균형발전개발계획에도 똑같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할 예산이 총 4,717억 6천3백만 원으로 알고 있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지원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400억밖에 되지 않으며, 재정자립도도 15%밖에 안되는 계룡시가 9년간이나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제외되었음. 지난 2011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한 충청남도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발전 격차분석을 한 것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계룡시가 15개 시·군 중 종합점수 3위로 평가되었

다고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음. 계룡시의 경우 면적이 60.78㎢인데 이 중 군사보호구역이 45%이고 임야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제대군인을 포함한 군인가족이 현역군인 12.4%를 포함하여 46%를 점유하고 있음. 또한 국방은 전형적인 공공재로 국방의 혜택은 전 국민이 받고 있으나 그 비용은 지리적 환경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만 부담하고 있어 지역발전 장애 등 불평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계룡시는 토지면적도 작지만, 그중에서도 45%가 세금을 한푼도 부과할 수 없는 군부대 부지이며 계룡시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가지고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도 못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학교에도 일체 보조금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지원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대상지역 선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연구보고서에서 개선방향으로 충남 균형발전정책 대상지역의 조정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하루속히 대상지역 선정을 재조정하여 계룡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충남도가 똑같이 균형발전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 주길 바람.



이종화 의원
[본회의 2016. 6. 17.]

가칭 충남체육중학교 설립 적극 검토 필요

- 서울 등 9개 교육청에서 체육중 운영 중...체육인재 육성 등 타 시·도 유출 방지
-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와 연계한 체계적인 지도 가능... 대한민국 미래 설계하는 일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지난 5월 28일부터 5월 31까지 4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었음. 우리 도는 35개 종목(초 19, 중 35), 1,108명(선수 786, 임원 322)이 출전하여 총 83개 메달을 획득 종합 8위를 달성함으로써 충남 학교체육의 위상과 210만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였음.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기초종목과 지역 전략종목을 육성하고자 동계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체계적인 훈련과 훈련현장 방문 격려, 컨설팅,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자 중심의 협의회 및 효율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지난해 11위에서 3단계가 상승한 8위를 달성했음. 다만 아쉬운 점은 「학교체육진흥법」 제8조 제3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국소년체전 준비 등을 위한 초·중학생의 합숙훈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과 창의적 체육인을 육성하고 학생의 기본권이 보장된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이 행복하게 운동에 전념하는 학교운영도 제도적으로 도입할 시기라고 생각함. 학교체육 현실은 축구, 농구, 야구 등

인기종목에는 참여자가 많고 투자와 지원도 아낌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체육의 기본인 육상이나 수영 등 비인기 종목에는 선수층이 적은편이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학업과 체육을 동시에 배우는 학생들이 있음.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가칭 공립 충남체육중학교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설립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구 광천여중 등 도내 폐교되는 학교를 재활용 하고 인근에 있는 광천체육공원 경기장 시설을 활용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리라 생각됨. 다른 도의 경우 이미 9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전남, 경북, 강원)가 체육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학습운영은 대부분 오전 5교시는 국어, 영어 등 일반교과 학습을 하고, 오후 학습일정은 수영 등 전공선택을 수업하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며 능력있는 체육인을 그리고 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체육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칭 충남체육중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길 당부함.



행정자치위원회 6. 8. ~ 9.

도내 균형발전 사업 현장 점검 나서

- 공주 탄천산단 복합주거시설 및 서천특화시장 등 찾아 현안 사항 점검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6.15. ~ 16.

전남도 친환경농업시설 현장 방문

- 담양 두리농원 유기농 쌈채소 등 생산시설 및 교육관 찾아 도내 친환경농업 문제점 진단
- 도내 친환경농업 정체가... 면적과 생산량 급감 추세지만, 가격변동 없어 대책 절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6. 27.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점검

- 대산항 및 대산청 사업 현황 청취를 위해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방문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

- 매년 반복적으로 미수납액 이월 행태 바로 잡아야... 불용액 과다 지적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7일 제287회 정례회 도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결산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미수납액의 이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낙구 위원장은 “불용률이 8.41%로, 2013회계연도 3.8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수납액의 이월 행태와 집행 잔액 25% 이상 건에 대한 과다 불용

처리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개발기금의 채무면제이익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 물예산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낙구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



유병국 의원



윤지상 의원



이기철 의원



이용호 의원



조길행 의원



조치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에 '지방' 명칭 뺀다

- 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수정 가결
- 의료원 건전성 높이기 위한 중요재산 관리 등 도지사 승인 얻어야

앞으로 충남지역 공주·천안·서산·홍성 지방의료원을 호명할 때 '지방'이라는 명칭이 삭제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12일 제28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먼저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을 '의료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골자다.

또 지방의료원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재산의 관리 등 예산이 수반되는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수정했다. 이는 도지사가 예산 사용 여부에 대한 승인을 통해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처방인 셈이다. 오배근 위원장은 "의료원의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불가피했다"며 "착한 적자가 진정으로 도민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복위는 조례안 심사에 이어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삭감된 사업을 그대로 추경에 계상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배근 위원장



유찬종 부위원장



김 연 의원



김원태 의원



김종필 의원



윤석우 의원



이공휘 의원



정정희 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사회적 기업 자생력 및 지속성장 발판 마련

- 김종문 의원 대표 발의... 도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 추경 심의 선심성 예산 편성 질타...도민 행복을 위한 예산 책정해야... 현실 행정 주문

충남도내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발판이 마련됐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6월 11일 열린 1차 상임위 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구매 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도는 관할구역에서 사회적 경제 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추진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했다.



김홍열 위원장



강용일 부위원장



김명선 의원



김문규 의원



김복만 의원



김용필 의원



전낙운 의원



홍재표 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조기 착공 촉구

● 신도시 진입도로 사업비 41억 5,400만 원 감액... 정주여건 포기하는 처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6월 12일 열린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도시 진입도로(신도청~국도 45호선)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장은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사업비가 41억 5,400만 원이 감액됐다"며 "도로건설이 조기에 완공되지 못하는 것은 정주여건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A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조사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본부 추경 심의에서는 노후차량과 개인안전장비 교체, 소방청사 기능 보강 등 도민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



신재원 의원



오인철 의원



이진환 의원



정광섭 의원



조이환 의원



교육위원회



우레탄 유해물질 근본 방지대책 마련 촉구

● 도교육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 실시

교육위원회는 충남지역 일부 학교 운동장 우레탄 유해물질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 운동장을 폐쇄하는 것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위의 일관된 목소리다. 교육위는 6월 9일 열린 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충남지역 84곳 등 전국 학교 운동장에서 납 성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레탄이 검출돼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불안에 떨고 있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현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



김종문 의원



서형달 의원



송덕빈 의원



유익환 의원



장기승 의원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안면도 개발 등 4개 분야 종합 점검 나서

- 3농혁신, 안면도 개발, 당진·평택 도계분쟁,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 지원 등
- 성과와 문제점 등 집약·분석해 정책 재추진 여부 심층 검토... 도정 현안 돌파구 마련 앞장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정책특위)가 안면도 개발 등 4개 분야 활동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섰다.

정책특위는 6월 18일 도의회 특위의실에서 3농혁신, 안면도 개발, 당진·평택 도계분쟁,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 지원 등 역점 추진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 정책 재추진 여부를 검토했다.

실제 정책특위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통해 25년간 장기 표류사업이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고질적 문제

점을 되짚고, 도정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끈 게 사실이다. 2020년까지 600실 규모의 콘도와 워터파크, 컨벤션 건립 추진을 이끌어 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진·평택 도계분쟁과 관련해서는 자치권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이끄는 등 대응 체계와 협업 역할을 재편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지원 대책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제 산업 전략 모색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김홍열 의원
[5. 12.]

농어촌 물탱크 관리 허술... 도민 건강 위협

충남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상수도 물탱크 관리가 허술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상수도 물탱크의 경우 연중 청소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이른바 물탱크에 사수(오염돼 죽은 물)가 계속해서 고여 있기 때문이다. 도내 15개 시·군에 있는 마을 상수도 시설은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해 1,855곳이다. 문제는 이 상수도 시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시설관리를 비전문가인 이장과 마을주민이 담당하는 등 제대로 된 위탁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먹는 물 관리에 구멍이 뚫린 탓이다.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상수도 수질검사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은 총 137곳에 달했다. 올해 역시 112곳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자칫 '먹는 물'이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유익환 의원
[6. 13.]

농어업 분야 인재 육성 중지 모을 때

충남지역 농어업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충남도와 교육당국 등이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한다. 충남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선 체계적인 농어업 후계자 육성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교육의 질부터 높여야 한다.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이 열악하고, 예산 역시 부족하다. 공업계 학생들의 경우 기업과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등 다양·활성화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업계 학생의 경우 연계 실습 등이 부족해 취업 및 농업인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김종문 의원
[6. 21.]

전산 업체 변경 관련 혈세 낭비 의혹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안패치 파일을 원격에서 자동으로 설치하는 패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K 업체를 선정, 3년간 2억 678만 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 7천250만 원, 2012년 7천848만 원, 2013년 5천580만 원 등이다. 이는 2010년 인력이 상시 상주하지 않은 J업체와 계약한 4천 800만 원보다 연간 최대 3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집행한 것이다. '인력상주 부존재 및 부패'의 증거로는 ▲출근 대장 및 통제구역 출입관리대장 미제출 ▲검수조서 인력상주 부재 ▲재무과 제출 자료에 계약내역 누락 ▲상주자의 업무공백 대비 대체인력 미지정 등이 있다.



25건

제286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조례안 16, 예산안 2, 동의안 6, 건의안 1
원안가결 17, 수정가결 8

안전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비장애인 공무원들과 장애인공무원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관 임명 의무화 - 2명 증원(간호사무관 1, 간호 주사 1) 소방 사각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정원 반영 - 99명 증원(본부 15명, 소방서 등 84명)																																																							
조례안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 문구 및 서식 등의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조례안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동의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동산 기부채납 등 3건의 도유 재산 취득과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매각 1건에 대한 동의안 <table><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안전명</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재산현황</th></tr><tr><th>종류</th><th>건수</th><th>면적(㎡)</th><th>재산가액(천원)</th></tr><tr><td rowspan="3">1</td><td rowspan="3">(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동산 기부채납</td><td rowspan="3">취득</td><td>계</td><td>2(13)</td><td>105,048.37</td><td>48,571,793</td></tr><tr><td>토지</td><td>1(9)</td><td>72,518.00</td><td>36,958,219</td></tr><tr><td>건물</td><td>1(4)</td><td>32,530.37</td><td>11,613,574</td></tr><tr><td>2</td><td>송산2 중소협력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매입</td><td>취득</td><td>토지</td><td>1(4)</td><td>26,804.60</td><td>9,324,600</td></tr><tr><td>3</td><td>함덕일반산업단지 외투지역 토지 매매 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토지 매입</td><td>취득</td><td>토지</td><td>1(2)</td><td>16,816.00</td><td>3,750,000</td></tr><tr><td rowspan="3">4</td><td rowspan="3">충청남도 농어촌 특산물 전시 판매장 매각</td><td rowspan="3">매각</td><td>계</td><td>2(2)</td><td>1,878.81</td><td>2,213,538</td></tr><tr><td>토지</td><td>1(1)</td><td>534.00</td><td>1,584,912</td></tr><tr><td>건물</td><td>1(1)</td><td>1,344.81</td><td>628,626</td></tr></table>	연번	안전명	구분	재산현황				종류	건수	면적(㎡)	재산가액(천원)	1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동산 기부채납	취득	계	2(13)	105,048.37	48,571,793	토지	1(9)	72,518.00	36,958,219	건물	1(4)	32,530.37	11,613,574	2	송산2 중소협력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매입	취득	토지	1(4)	26,804.60	9,324,600	3	함덕일반산업단지 외투지역 토지 매매 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토지 매입	취득	토지	1(2)	16,816.00	3,750,000	4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물 전시 판매장 매각	매각	계	2(2)	1,878.81	2,213,538	토지	1(1)	534.00	1,584,912	건물	1(1)	1,344.81	628,626
연번	안전명	구분	재산현황																																																								
			종류	건수	면적(㎡)	재산가액(천원)																																																					
1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동산 기부채납	취득	계	2(13)	105,048.37	48,571,793																																																					
			토지	1(9)	72,518.00	36,958,219																																																					
			건물	1(4)	32,530.37	11,613,574																																																					
2	송산2 중소협력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매입	취득	토지	1(4)	26,804.60	9,324,600																																																					
3	함덕일반산업단지 외투지역 토지 매매 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토지 매입	취득	토지	1(2)	16,816.00	3,750,000																																																					
4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물 전시 판매장 매각	매각	계	2(2)	1,878.81	2,213,538																																																					
			토지	1(1)	534.00	1,584,912																																																					
			건물	1(1)	1,344.81	628,626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공익활동 촉진 및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그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 등이 확보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조례안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정정희 의원 (윤석우, 김원태, 김 연, 이공휘, 오배근, 김종필, 유찬종 의원)	원안가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고, 유관순상 시상식 개최장소를 충청남도 관할구역내로 제한하여 우리 도의 위상과 미래 인적자원 형성 도모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시정조치 요청 규정 강화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개정 - 도가 설치·운영하는 복지관의 수탁자 선정시 선정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 가능 규정 보완 - 상위법 저촉되는 위탁 취소 사항 삭제										
동의안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을 테마파크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백제문화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 위탁대상: 사비궁, 생활문화마을, 위례성 등 재현시설 154동 - 위탁기간: 최초 위탁개시 후 20년 (5년마다 재계약) - 손익배분: 운영 순이익금 또는 순손실금에 대하여 50:50 비율로 배분 - 위탁사무: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관람료 징수, 운영방안 수립, 홍보 및 마케팅 등										
동의안	2016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단위: 천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소관실과</th><th>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연금액</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식품의약과</td><td>공주의료원</td><td>공주의료원 신축이전비용지원</td><td>501,000</td><td>신규</td></tr> </tbody> </table>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식품의약과	공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신축이전비용지원	501,000	신규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식품의약과	공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신축이전비용지원	501,000	신규										
동의안	2016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단위: 천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소관실과</th><th>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연금액</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문화정책과</td><td>충남문화재단</td><td>2016 무지개다리사업 (공모선정)</td><td>10,000</td><td>신규</td></tr> </tbody> </table>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2016 무지개다리사업 (공모선정)	10,000	신규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2016 무지개다리사업 (공모선정)	10,000	신규										

안전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김중문 의원 (홍재표 의원)	원안가결	「공공분야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규정 마련																				
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중문 의원 (홍재표 의원)	수정가결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우선구매 촉진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보장 등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동의안	2016년도 제2회 경제 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단위: 천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소관실과</th><th>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연금액</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계</td><td></td><td>2건</td><td>480,000</td><td></td></tr> <tr> <td>전략산업과</td><td>충남테크노파크</td><td>충청권 SW품질 역량강화사업</td><td>80,000</td><td>국가직접지원 (국 80,000 도 80,000)</td></tr> <tr> <td>"</td><td>"</td><td>웨어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 개발사업</td><td>400,000</td><td>국가직접지원 (국 1,000,000 도 400,000 민 200,000)</td></tr> </tbody> </table>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2건	480,000		전략산업과	충남테크노파크	충청권 SW품질 역량강화사업	80,000	국가직접지원 (국 80,000 도 80,000)	"	"	웨어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 개발사업	400,000	국가직접지원 (국 1,000,000 도 400,000 민 200,000)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2건	480,000																					
전략산업과	충남테크노파크	충청권 SW품질 역량강화사업	80,000	국가직접지원 (국 80,000 도 80,000)																				
"	"	웨어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 개발사업	400,000	국가직접지원 (국 1,000,000 도 400,000 민 200,000)																				
조례안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백낙구 의원 (이종화 의원)	수정가결	도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석곤 의원 (홍성현, 맹정호, 송덕빈, 김중문, 서형달, 유익환 의원)	원안가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충청남도내 소재한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 : 매년 -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 등 안전의무 이행 -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안전 감시망 구축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서형달 의원 (홍성현, 맹정호, 김석곤, 송덕빈, 김중문, 장기승, 유익환 의원)	원안가결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에서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충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 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홍성현 의원 (맹정호, 김석곤, 송덕빈, 김중문, 서형달, 장기승, 유익환 의원)	원안가결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도민 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감사행정의 도민참여 확대로 감사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직 비리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충남교육 도민감사제 운영																														
조례안	충청남도 미래교육자문 위원회 운영 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기금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금액이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기금 조성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인상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도모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예산총규모는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회계 별</th><th>추경 예산안</th><th>기정예산액</th><th>비교증감</th><th>증감률(%)</th></tr> </thead> <tbody> <tr> <td>합 계</td><td>6,296,389</td><td>5,628,034</td><td>668,355</td><td>11.88</td></tr> <tr> <td>일반회계</td><td>4,784,200</td><td>4,557,000</td><td>227,200</td><td>4.99</td></tr> <tr> <td>특별회계 (10종)</td><td>1,512,189</td><td>1,071,034</td><td>441,155</td><td>41.19</td></tr> <tr> <td>기타특별회계 (9종)</td><td>499,189</td><td>443,134</td><td>56,055</td><td>12.65</td></tr> <tr> <td>공기업특별회계 (1종)</td><td>1,013,000</td><td>627,900</td><td>385,100</td><td>61.33</td></tr> </tbody> </table>	회계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296,389	5,628,034	668,355	11.88	일반회계	4,784,200	4,557,000	227,200	4.99	특별회계 (10종)	1,512,189	1,071,034	441,155	41.19	기타특별회계 (9종)	499,189	443,134	56,055	12.65	공기업특별회계 (1종)	1,013,000	627,900	385,100	61.33
회계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296,389	5,628,034	668,355	11.88																														
일반회계	4,784,200	4,557,000	227,200	4.99																														
특별회계 (10종)	1,512,189	1,071,034	441,155	41.19																														
기타특별회계 (9종)	499,189	443,134	56,055	12.65																														
공기업특별회계 (1종)	1,013,000	627,900	385,100	61.33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감	수정가결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예산총규모는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회계 별</th><th>추경 예산안</th><th>기정예산액</th><th>비교증감</th><th>증감률(%)</th></tr> </thead> <tbody> <tr> <td>세입·세출</td><td>3,020,286</td><td>2,852,553</td><td>167,733</td><td>5.9</td></tr> </tbody> </table>	회계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세출	3,020,286	2,852,553	167,733	5.9																				
회계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세출	3,020,286	2,852,553	167,733	5.9																														
건의안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	대표발의: 김명선 의원 (이용호, 정정희, 김응규, 윤지상, 이기철, 장기승 의원)	원안가결	원칙과 기준이 없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 조정을 일원화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이를 반대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여 지방자치관할권을 지키려는 것임																														



조례안 8, 결산승인안 6, 동의안 1, 결의안 3
원안가결 17, 수정가결 1

48 | 2016 제72호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2016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정원 총수 4,085명 → 4,075명 (10명 감)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예산회계 결산 (단위:백만원) <table><tr><th>구분</th><th>세입</th><th>세출</th><th>세계잉여금</th></tr><tr><td>계</td><td>6,272,415</td><td>5,577,722</td><td>694,693</td></tr><tr><td>일반회계</td><td>5,082,438</td><td>4,766,026</td><td>316,412</td></tr><tr><td>특별회계</td><td>1,189,977</td><td>811,696</td><td>378,281</td></tr></table> 재무회계 결산 (단위:백만원) <table><tr><th colspan="2">재정상태</th><th colspan="2">재정운영성과</th></tr><tr><td>자산</td><td>부채</td><td>비용</td><td>수익</td></tr><tr><td>14,175,900</td><td>980,286</td><td rowspan="2">4,604,966</td><td>4,843,995</td></tr><tr><td></td><td>순자산</td><td>재정운영결과</td></tr><tr><td></td><td>13,195,614</td><td>△ 239,029</td></tr></table>	구분	세입	세출	세계잉여금	계	6,272,415	5,577,722	694,693	일반회계	5,082,438	4,766,026	316,412	특별회계	1,189,977	811,696	378,281	재정상태		재정운영성과		자산	부채	비용	수익	14,175,900	980,286	4,604,966	4,843,995		순자산	재정운영결과		13,195,614	△ 239,029
구분	세입	세출	세계잉여금																																			
계	6,272,415	5,577,722	694,693																																			
일반회계	5,082,438	4,766,026	316,412																																			
특별회계	1,189,977	811,696	378,281																																			
재정상태		재정운영성과																																				
자산	부채	비용	수익																																			
14,175,900	980,286	4,604,966	4,843,995																																			
	순자산		재정운영결과																																			
	13,195,614	△ 239,029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예비비 지출 총액 (단위:백만원) <table><tr><th rowspan="2">예산액</th><th colspan="4">지출결정</th></tr><tr><th>계</th><th>지출</th><th>이월</th><th>집행잔액</th></tr><tr><td>52,645</td><td>7,718</td><td>7,566</td><td>55</td><td>97</td></tr></table>	예산액	지출결정				계	지출	이월	집행잔액	52,645	7,718	7,566	55	97																				
예산액	지출결정																																					
	계	지출	이월	집행잔액																																		
52,645	7,718	7,566	55	97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기금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table><tr><th>구분</th><th>2014연도말 현재액</th><th>2015연도중 증감액</th><th>2015연도말 현재액</th></tr><tr><td>금액</td><td>228,606</td><td>△1,852</td><td>226,754</td></tr></table>	구분	2014연도말 현재액	2015연도중 증감액	2015연도말 현재액	금액	228,606	△1,852	226,754																										
구분	2014연도말 현재액	2015연도중 증감액	2015연도말 현재액																																			
금액	228,606	△1,852	226,754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세입·세출 결산 (단위:백만원) <table><tr><th>구분</th><th>세입</th><th>세출</th><th>세계잉여금</th></tr><tr><td>금액</td><td>3,229,126</td><td>2,881,550</td><td>347,576</td></tr></table>	구분	세입	세출	세계잉여금	금액	3,229,126	2,881,550	347,576																										
구분	세입	세출	세계잉여금																																			
금액	3,229,126	2,881,550	347,576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예비비 지출 총액 (단위:백만원) <table><tr><th rowspan="2">예산액</th><th colspan="4">지출결정</th></tr><tr><th>계</th><th>지출</th><th>이월</th><th>집행잔액</th></tr><tr><td>16,186</td><td>291</td><td>289</td><td>0</td><td>2</td></tr></table>	예산액	지출결정				계	지출	이월	집행잔액	16,186	291	289	0	2																				
예산액	지출결정																																					
	계	지출	이월	집행잔액																																		
16,186	291	289	0	2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 학교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기금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table><tr><th>구분</th><th>2014연도말 현재액</th><th>2015연도중 증감액</th><th>2015연도말 현재액</th></tr><tr><td>금액</td><td>0</td><td>23,122</td><td>23,122</td></tr></table>	구분	2014연도말 현재액	2015연도중 증감액	2015연도말 현재액	금액	0	23,122	23,122																										
구분	2014연도말 현재액	2015연도중 증감액	2015연도말 현재액																																			
금액	0	23,122	23,122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충청남도 청소년 성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표발의 : 홍재표 의원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전낙운 의원)	원안가결	충청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 설치로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법인 등에 위탁하여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결의안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홍재표 의원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전낙운 의원)	수정가결	현행 단일 전기요금제에는 환경·송전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전력생산지와 소비지가 동일한 전기요금이나, 발전 및 송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전력생산지에서 고스란히 감내하는 실정으로 전기요금 제도가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개편되도록 촉구
결의안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김 연 의원 (이공휘, 오배근, 윤석우, 김원태, 김종필, 정정희 의원)	원안가결	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 악화가 명확히 예상되는 예산 절감용 맞춤형 보육정책의 철회 촉구
결의안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	대표발의 : 김홍열 의원 (강용일,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전낙운, 홍재표 의원)	원안가결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농어촌 교육환경을 약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재검토 촉구



도내 문화시설 및 유흥시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의정토론회(4. 21.)

도내 문화시설 및 유흥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아산 탕정면사무소에서 도내 문화시설 및 유흥시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지상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도내 방치된 문화·유흥시설을 여가·취미·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구상을 짜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우리 마을 문화 공간 만들기'다.

좌장을 맡은 윤 의원은 "최근 주거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있다"며 "관이나 외부 예술자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지역민 스스로 주도성이나 재생건물을 꾸며 새로운



문화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테이트모던 갤러리, 독일 클투어 브라우저라이, 미국 첼시마켓 등 모두 유흥시설 및 공간을 재활용한 사례로 꼽힌다"며 "이 공간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생의 롤모델로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 역시 지역기반의 예술가와 주민 간 문화를 스스로 생산해내는 참여를 이끌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이 도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의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 절감 방안 의정토론회(5. 27.)

도교육청 전산장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은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충남교육청의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 절감 방안을 논의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 토론회는 도교육청의 포괄적이고 복잡한 전산 관련 '누수 예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조재운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 절감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충남교육청이 전산사업을 할 때 많은 부분을 누락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자산매각·경쟁 이익을 포기한 채 재고털이를 목적으로 한



단종 제품을 반복 구매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2009년 7월 단종 경과기간이 3년 4개월이 된 A사 스토리지(메일) 제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후 2012년 또다시 단종 경과가 3년 6개월이 지난 같은 회사 제품을 증설했다. 기록 관리를 위해서 2013년 단종 된 지 2년 4개월이 된 B사 제품을 신규로 도입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각종 전산 장비 구매 및 업체 선정 등에서 불필요한 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중·고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6. 22.)

초·중·고교 체육 활성화 위한 정책 마련 골몰

충남도의회가 도내 초·중·고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안 진단 및 정책 마련에 나섰다. 체육시간을 등한시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천안 교육지원청에서 ‘충남 초·중·고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내 아동 및 청소년 등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동부족으로 성인병이 증가하는 동시에 교육 관계의 불만족 등 사회적 병리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엘리트 체육 역시 학부모 임금, 학교 숙소, 대회 출전 등 다양한 사례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미래사회와 학교 체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당국과 학부모 등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방청객들과 토론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강화 등으로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과의 연계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도의회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 심리적 외상 청소년 지원길 마련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6. 29.)

사회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청소년 지원 길 마련 첫발

충남도내 사회 심리적 외상(PTSD) 스트레스 징후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치료·지원할 체계적인 공간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소년의 경우 해상 또는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심각한 PTSD에 시달려 극단의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29일 아산시청소년문화교육센터에서 ‘사회 심리적 외상 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연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도내 청소년들의 PTSD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연 의원은 “외상 스트레스를 경험한 10~20% 사람은



PTSD를 겪게 된다”며 “가출, 학업중단, 가정폭력 등 다양한 청소년의 위기 상황이 PTSD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충남의 경우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조기평가와 치료에 제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공휘 의원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의존 형태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의 안전자치, 민관협업의 쌍방향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건강한 심리적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입하도록 한 전담기구 설치 및 제도적 조려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팡파르

4월 18일~20일 5개국 11개 지자체 21세기 동북아 지역 미래와 가치 논의
실질적인 문화·관광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지방정부 간 경제 발전 견인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미래와 가치를 논의하는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이 4월 18일 예산 덕산리솜스파캐슬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11개 지방의회 관계자와 관광협력단 등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동북아 공통관심사를 공유하고, 교류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은 이날 영접반을 편성, 공항에서부터 중국 등 동북아 지방의회 관계자를 환대했다. 본격적인 포럼이 열리기 전에 앞서 5개국 11개 지자체 관계자와 관광협력단 등은 충남공예협동조합이 리솜스파캐슬에 전시한 공예품을 관람했다. 공예품은 백제문화의 혼이 담긴 상품과 지역 특성을 나타낸 상품 등 총 40여 점이 전시됐다. 5개국 지방의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공예품 체험과 백제의 문화를 익히는 동시에 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어 '천년사찰'로 알려진 수덕사 탐방 길에 오른 동북아 지방의회 관계자는 우리 불교문화의 이해와 가치를 함께 인식했다. 또 전통 차 시음을 통해 '느림의 미학'을 배우는 등

우리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이어 김기영 의장과 개별적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관광 교류 협력 방향 등을 논의했다. 왕진평(王振平) 허베이성 인대 상무위원회 연구실 주임은 "허베이성과 충남은 다양한 자연지형이 갖춰져 있는 등 공통점이 매우 많다"며 "레저와 휴가 등 협력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하시미즈요시 니가타시의회 의장은 "한층 새로운 동북아 관광 교류와 문화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대안이 실질적으로 접목되도록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의장은 "충남은 동북아 문화와 관광 교류에 있어 기회와 잠재력이 있다"며 "충남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문화와 전통 공감대 높여야

동북아 지역 간 공연 예술 공동 제작 및 동북아 문화관광 골든 10선 등 사업 발굴 제안
정부보장 메커니즘 구축 동시에 연락 소통 협력 장기적이고 유효한 시스템 정비해야

동북아 국가 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선 문화와 전통에서 발생하는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4월 19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을 열고 동북아 관광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5개국 11개 지자체 관계자 10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동북아 지역 간 '공연 예술 공동 제작' 및 '동북아 문화관광 골든 10선' 등 사업 발굴을 제안했다.

동북아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데다, 문화적 유사성이 짙은 만큼 역사·문화,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 협력 등 공동 번영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 원장은 "음악제 혹은 미술제를 중심으로 함께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해 국가별 순회 공연하는 문화관광 상품을 모색해야 한다"며 "문화예술계 및 동호인들과 협력해 만남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는 물론,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며 "대중문화 아이콘을 활용한 이벤트와 세시풍속 등을 소재로 한 체험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부야 마사토시 아키타현의회회장은 "드라마 아이리스의 촬영지가 바로 아키타현이었다"며 "당시 엄청난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됐지만, 최근에는 엔화 약세 등으로 관광객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을 중심으로 국제 문화 교류 추진 및 불꽃놀이 문화의 교류의 장을 열고 싶다"며 "문화와 역사에 접하는 체험형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수타오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은 "관광산업은 동북아 각 나라 발전의 중요한 산업"이라며 "정부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연락 소통 협력의 장기적이고 유효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영 의장, “동북아 공동 번영 위한 역할 모색해야”

동아시아 평화와 문화교류의 중심… 교류 통한 경제적 번영 노력야
민항기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고속전철 등 하늘과 뱃길, 땅 길 개선 경주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은 4월 19일 열린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동북아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진정한 역할을 모색하고, 상호협력 증진에 앞장서자”고 제언했다.

김 의장은 “충남도는 지난 82년간 대전시의 시대를 마감하고 21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2013년 내포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며 “충남은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백제 왕도의 후손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문화교류의 중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지역경제 성장을 1위, 청년고용률 1위 등 도민 삶의 만족도가 어느 지방정부보다 높은 선진 자치도”라며 “지난해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며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그동안 동북아 각 지역은 친밀한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경제협력과 발전을 이뤘다”며 “유럽,

북미 지역과 대등한 세계 3대 경제축을 형성하며 급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에 동북아 5개국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우리 11개 지자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환황해 중심지역으로 비전을 마련, 민항기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고속전철 건설 등 하늘과 뱃길, 땅 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하고 있다”며 “충남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 문화와 관광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경제적 번영을 함께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세계 역사상 26개의 문명권이 각각 성장·발전·쇠퇴·해체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지만, 우리 동북아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며 “협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 간 문화·관광 교류 통한 경제 발전 한 뜻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4월 20일 사흘간 일정 마무리... 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
 동북아 간 마케팅 활동 통한 세계시장 겨냥 초석 마련... 관광트렌드 변화 연대

충남도의회 주최로 도내 일원에서 열린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이 4월 20일 사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 간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상호 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모색했다. 특히 동북아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관광협회 간 상품개발 및 공동 마케팅 등 교류 협력 확대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실제 도의회는 지난 사흘간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와 해미읍성 투어 및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주력 관광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 전략적으로 도내 문화와 관광지를 알렸다. 이는 동북아 시장이 확장함에 따라 중국 등 관광객 유치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동북아 4개국 9개 지자체 역시 지역별 문화와 관광 자원을 홍보하면서 상호 문화·관광 교류와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가기로 중지를 모았다. 도의회는 이번 동북아 포럼을 기점으로 중국경제 부상 등 국제적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간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동북아 역외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십 확립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서산 민항 유치와 대산항 국제선 취항 등 동북아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르차코브 빅토르 러시아 연해주의회 의장은 "독특한 자연을 가진 충남에서 생태관광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며 "동북아 민족의 운명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동북아지역 간 통합된 관광공간을 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민간분야 관광실무진으로 참여한 김인배 충남관광협회장은 "동북아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체육대회, 축제 등에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며 "지속적인 동북아 관광발전을 위해 협회와 의회,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영 의장은 "동북아 지방정부 간 미래지향적 문화 관광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며 "이번에 지시된 내용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정책에 반영되어 도민의 이익 증진과 동북아 공동 번영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결산

제10대 충남도의회, 지난 2년 간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잘했다’

각종 현안 실태를 푸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 가교 역할 충실... 도민 대변자로 우뚝
총 255일간의 회기 동안 343개 안건 처리... 도민 삶과 질 향상과 경제 협력 초점 등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어느새 약관(弱冠)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정치권 등 중앙의 엘리트들은 집중된 권력을 놓으려 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권한을 이양시켜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남도의회 40명 의원의 어깨는 언제나 무겁다.

이들은 지난 2년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었다. 실제 견제와 감시, 도민을 향한 양방향 소통 등은 제10대 충남도의회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지난 2년간 활발한 입법 활동과 선진 의정 실현,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 등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에 앞장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충남도의회 전반기 2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다.

충남도의회는 6월 13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을 갖고 체계적인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경제 협력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유익환 제1부 의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했다.

성과와 보람

지난 2년간 40명 도의원 의정활동에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녔다. 255일간(17회) 34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현안 해결을 둘러싼 견제와 감시 정신이 투철했던 것은 이미 기록으로 검증됐다.

실제 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총 9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됐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입법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개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론을 대변하기 위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 17건의 결의안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등 3건의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874건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시정과 처리를 요구했다. 9차례 진행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의원들이 79차례 발언대에 올라 221건에 대한 현안의 난맥상을 짚었고, 77건의 5분 발언을 통해 가뭄 대책 등 지역 현안을 진단했다.

이와 별개로 국제교류의 경우 지난 2년간 중국 지린성과 원난성, 헤이룽장성 등 5개국 10개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열정을 쏟았다.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도의회는 지난 2년간 토론회 및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도민 욕구를 충족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각 상임위는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 안전·건설, 교육 등 분야별 맞춤 현안을 선정했다. 그 결과, 총 28회에 걸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을 조언받는 등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했다. 이와 연계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등 7개 분야별 모임 활동을 통해 현안의 실태를 푸는 등 지역 민의를 대변했다.

국제적 위상 강화

도의회는 2016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의제를 '동북아시아 지역 간 문화 관광 교류 협력 방안'으로 정하고 5개국 11개 지방의회를 지난 4월 18일 충남으로 불러들였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동북아 지역 간 문화·관광 교류를 넘어 경제 협력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선순환 구조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의정력을 쏟았다. 이는 도내 국제관광객 비율이 2~3%대로 미약한 만큼 동북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도의회는 이번 포럼을 발판 삼아 백제 문화를 동북아에 전파하는 등 관광 상품화를 통한 문화·관광 경쟁력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당장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성과는 동북아시아 지역 간 문화를 교류하고 동반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데 있다.

향후 도의회는 중국경제 부상 등 국제적 관광트랜드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간 연대 등 심층적인 문화 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도민 소통 최고

충청남도의회는 온·오프라인(on·offline) 도민 소통은 전국 으뜸으로 정평이 나 있다. 보도·사진 자료 수집 및 활용은 물론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도민 관심도 꾸준히 증가한 덕분이다. 충청남도의회가 자체 분석한 SNS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 중 충남·경기도의회가 4개 이상의 SNS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경우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 등 활용해 도민 목소리를 듣는가 하면, 생생한 의정 활동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실제 제10대 의회가 들어선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접속한 네티즌은 3만 1천408명에 이르렀다. 블로그의 경우 1만 7천여 명이 접속하면서 활발한 온라인 소통을 보였다. 지난 2년간 약 1만 7,963건의 자료를 업로드하면서 약 1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충청남도의회 각종 온라인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사진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업로드 역시 충청남도의회가 전국 광역 의회 중 압도적으로 높았다. 10대 의회 들어 총 2,278건(보도 1,063, 사진 1,215)의 보도자료 및 사진 자료가 쏟아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풀어야 할 과제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 및 의원보좌관제도 도입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충남도 내년도 예산이 6조 원을 넘어선 것을 고려할 때 의원 1명당 평균 1,500억 원을 심의하고 있다는 게 도의회의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짧은 기간 방대한 예산의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결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기영 의장은 “평균적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보좌진 1명이 국가 예산 1,500억 원을 심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보좌관이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 위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바로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지난 2년간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01	4월 21일	김기영 의장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충남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02	4월 21일	김기영 의장은 홍예공원에서 열린 내포신도시 유채축제에 참석했다.
03	4월 23일	김기영 의장, 유익환 제1부위원장, 이진환 제2부위원장은 충남 부여 백제문화단지에서 중국 구이저우성 천민원 공산당 서기 일행과 간담회를 가졌다.
04	4월 25일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김기영 의장은 충남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연등점등 법회에 참석했다.





05



06

- 05 4월 29일 김기영 의장은 예산군 충의사에서 열린 제43회 매헌 윤봉길 평화축제 기념식 및 윤봉길 의사 상해의거 84주년 다례행사에 참석했다.
- 06 4월 29일 김기영 의장, 유익환 제1부위원장, 백낙구 행자위원장, 이종화 안전해소위원장, 김응규 의원, 조이환 의원, 정광섭 의원은 대천항에서 열린 충남 항만순찰선 취항식에 참석했다.
- 07 5월 3일 김기영 의장, 이기철 의원은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충남관광객 2천만 도약을 위한 관광 환대서비스 다짐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 08 5월 4일 김기영 의장은 충남도청 일원에서 열린 2016 내포 영산홍 축제에 참석했다.



07



08



0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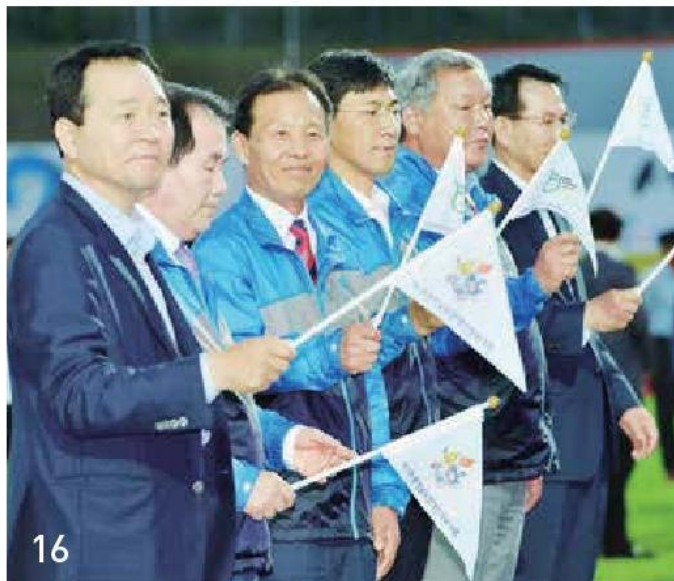


12

- 09 5월 12일 김기영 의장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열린 2016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 10 5월 13일 유익환 제1부 의장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 11 5월 14일 오배근 문북위원장, 김연 의원은 예산군 수덕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법회에 참석했다.
- 12 5월 16일 맹정호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13 5월 20일 김기영 의장은 서천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 14 5월 25일 김기영 의장, 김용필 의원은 예산군 삼교읍에서 열린 삼교지구대 개소식에 참석했다.
- 15 5월 27일 김기영 의장은 논산시 연무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충남자활 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16



17

- 16 6월 3일 유익환 제1부 의장은 부여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2회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 17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김기영 의장, 오배근 문복위원장, 이종화 안전해소위원장은 충남보훈공원에서 헌화 및 분향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의 넋을 기렸다.
- 18 6월 9일 김기영 의장은 예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18



- 19 6월 10일 김기영 의장, 유익환 제1부의장은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개원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포럼에 참석했다.
- 20 6월 15일 유익환 제1부의장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6년 충남 지역치안협의회에 참석했다.
- 21 6월 16일 유익환 제1부의장은 서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16 생활개선 실천다짐대회에 참석했다.



느낌 여행 충남



[금산] 금강여울축제

기 간 2016. 7. 30. ~ 7. 31.
장 소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
연락처 금산문화원 041-754-2724

금강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한 뗏목타기와 강변슬라이딩, 금강족욕체험 등의 '물체험'은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한다. 경운기를 타고 옥수수, 감자 등 농작물을 캐러가는 농촌체험과 다슬기잡기, 맨손고기잡기 등의 강변체험은 어린이들에게 시골 농촌의 독특한 재미를 안겨준다. 날이 어두워지면 금산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농바우고시기, 물떼기농요 등 전통민속공연이 펼쳐져 한여름밤의 감동을 선사한다.



[논산] 상월명품고구마축제

기 간 2016. 9. 3. ~ 9. 4.
장 소 논산시 상월면 금강대학교
연락처 상월명품고구마축제추진위원회
041-746-8673

맛도 명품! 건강에도 명품! '상월명품고구마축제' 계룡산의 정기를 듬뿍 받은 땅속 영양의 보고, '상월명품고구마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선한 땅의 기운과 숨소리를 그대로 전해주는 고구마가 제철을 맞아 인심 넉넉한 상월면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상월명품고구마축제'에서 땅과 호흡하며 땅의 기운을 그대로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의회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접속방법

- ①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 주소
(council.chungnam.go.kr) 입력
- ② 안드로이드 마켓에 충청남도의회 검색 후 앱 설치
- ③ PC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충청남도의회를 검색하여
앱 설치(내폰으로 보내기)
- ④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의회 방청 안내

방청문의 : 총무담당관실
041-635-5054

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에서 방청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041-635-50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청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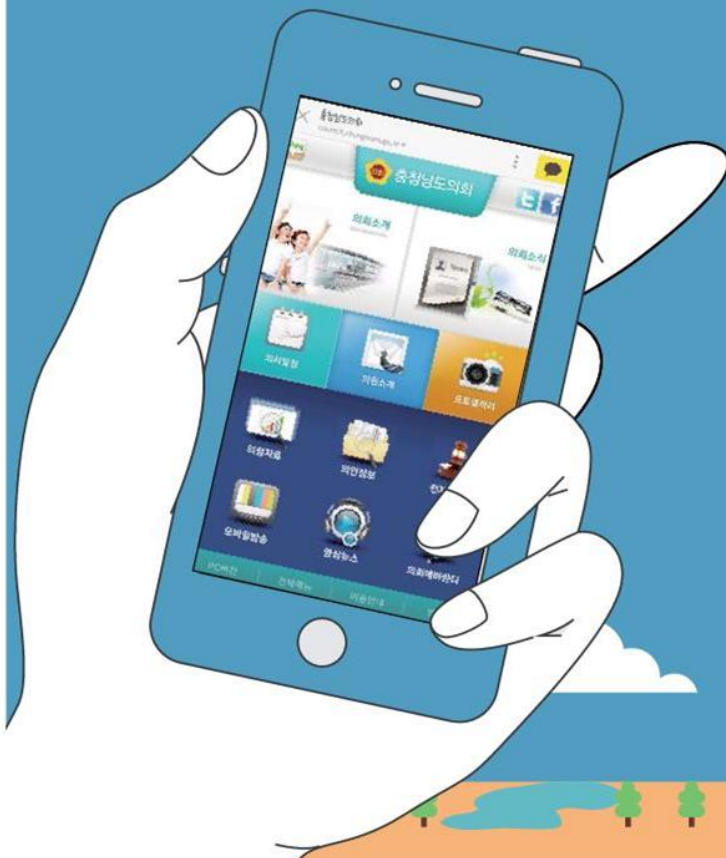
-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장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등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

-  <http://blog.naver.com/cncouncil>
-  <http://www.facebook.com/cncouncilNP>
-  <http://mobile.twitter.com/council>
-  카카오톡에서 Cnc12 검색 후 소식받기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방법

- 이메일 : jungsnk@korea.kr
 - 전 화 : 041-635-5102
 - 팩 스 : 041-635-5009
 - 우 편 :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충청남도의회)
- ※ 구독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습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